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의 지역별 창업성과 분석

- 2019. 9.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건국대학교 박재민

제 출 문

국회의산정책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의 지역별 창업성과 분석”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09. 06.

연구기관명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박 재 민

연 구 원 : 김 규 태

연 구 원 : 봉 강 호

요 약 문

1. 연구개요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지역산업정책 추진에 따른 실질적 체감성과는 미흡
-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이 긴요

□ 연구목표 및 내용

-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국내 정책현황 및 사업현황 분석
- 지역전략산업별 혁신창업기업 성과분석
-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혁신창업 활성화지원 개선방안 도출

2. 지역전략산업육성 정책현황

□ 국가균형발전정책 개요 및 추진경과

- 중앙정부 주도의 다양한 지역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경제력 등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은 지속
- 지역발전정책은 2000년대 참여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9년 1월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 지역별 특성 및 비교 우위, 국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전략산업을 선정, 이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자생적 발전을 유도

□ 국가균형발전정책 현황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편성
- 문재인정부는 2018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선포
-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으로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발표
-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기조를 바탕으로 향후 5년(‘18~‘22)의 지역과학기술육성의 목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 2019년 2월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하였으며, 기술영역에 대한 4개 투자분야와 함께 ‘혁신생태계’ 분야를 추가하고 ‘지역주도의 R&D 역량 강화 지원’을 강조

□ 지역별 전략산업육성사업 추진현황

- 17개 시·도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비전 및 발전계획을 수립,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을 주도·실현하고 있음
-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공동 수립, 지역별로 향후 5년간 지방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핵심과제 도출 및 지방정부 투자계획을 제시
- 각 지역별로 추진과제를 제도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수립 함으로써 목표의 구체성 강화

□ 지역전략산업육성 정책진단

- (지속성 부족) 지역산업정책의 성공에는 지속성이 관건인 반면, 중앙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하여 불연속성 문제 발생
- (성과관리 미흡) 다양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관리가 미흡

3. 지역전략산업별 혁신창업기업 성과분석

□ 혁신창업기업의 성과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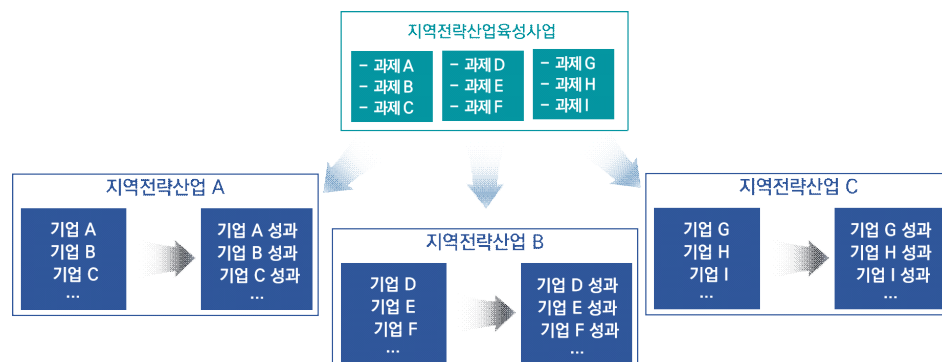
- (정부지원 효과) 정부지원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혁신창업기업의 1인당 연구개발비 및 특허출원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연구개발비 결정요인) 투자유치 및 정부지원 수혜규모, 창업자의 산업체경력, 연구개발인력비중, 과거 매출액 등은 혁신창업기업의 1인당 연구개발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1인당 매출액 결정요인) 혁신창업기업의 생산성은 기업의 1인당 연구개발비 및 과거 1기($t-1$)의 매출액에 따라 높아지는 관계성을 보임
- (특허성과 결정요인) 혁신창업기업의 특허성과는 투자유치 및 정부지원 규모, 관련특허보유, 창업자의 과거 창업경험, 1인당 연구개발비 등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 결정요인) 기업이 유치한 투자규모 증대는 고용확대를 결정할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이러한 가능성이 감소

□ 시사점

- 재정효율성 관점에서 혁신창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 － 혁신창업 및 기업 성장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한 허들임
 - －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국고예산이 투입되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이러한 허들을 넘어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되어야 하겠음
 - － 국고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창업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부문 또는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연계 강화가 중요
- 지역전략산업육성 관련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이 시급
 - － 관련된 가용 데이터의 부재로 문제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진단에 한계 존재
 - － 구별된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의 효과 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 조사 필요

□ (참고)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 효과분석 방안

-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에 따라 집행된 예산 및 추진된 사업 성과를 타 정책효과와 구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재
- 이에 따라 연구진은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의 효과분석 방안 도출과정의 예시로서 다음의 과업을 수행함
 - － 중앙정부 예산 내 지역전략산업육성과의 관련성 있는 계정 및 사업 분류
 - － 지역전략산업육성 관련 부처별 사업예산 및 과제, 과제별 성과 데이터 수집·정리(국회예산정책처 협조)
 -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18년 개정 기준)-지역전략산업 매칭을 위한 전문가 자문·분석
 - － 지역전략산업별 혁신창업기업 대상 설문결과 활용 성과분석(3장)
- (향후 연구방향 제언)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 관련 현황 전수조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지역전략산업 간 세부 매칭, 다층모형을 활용한 계량분석 등 필요



4.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혁신창업 활성화지원 개선방안

□ 성과 결정요인을 고려한 창업지원사업 설계

- 동 연구에서는 혁신창업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및 매출, 특허출원 등 증대, 고용 확대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음
-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구결과는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음
- 수요자 관점에서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혁신창업 지원사업 기획·추진 필요

□ 지역 주도 R&D 정책으로 지역혁신의 패러다임 전환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시스템을 전환, 각 지역이 고유한 특성이나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내생적인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도록 방향 설정
- 지역주도 R&D 정책에 따라 지역전략산업육성, 즉 지역혁신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R&D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 평가환류 필요
- 지역전략산업 생태계 내 혁신역량 제고 및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인력양성 확대
-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군특회계 내 포괄보조사업의 비중을 확대하여 지역 주도성 강화

□ 지역전략산업과 국가산업육성과의 역할분담 및 연계 강화

- 중앙정부의 국가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사업과 지역의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사업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중복 방지 및 효율성 제고
- 각 지역의 창업 및 산업기술지원 기관이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층 인재가 각 지역 산업으로 연결되는 경로 마련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목표 및 내용	5
II. 지역전략산업육성 정책현황 및 진단	6
1. 국가균형발전정책 개요 및 추진경과	7
2. 국가균형발전정책 현황	14
3. 지역별 전략산업육성사업 추진현황	23
4. 지역전략산업육성 정책진단	45
III. 지역전략산업별 혁신창업기업 성과분석	48
1. 분석개요	49
2. 혁신창업기업 실태현황	50
3. 혁신창업기업 성과분석 결과	64
4. 소결	75
IV.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혁신창업 활성화지원 개선방안	79
1. 성과 결정요인을 고려한 창업지원사업 설계	80
2. 지역 주도 R&D 정책으로 지역혁신의 패러다임 전환	80
3. 지역전략산업과 국가산업육성과의 역할분담 및 연계 강화	82
V. 참고문헌	83
VI. 부록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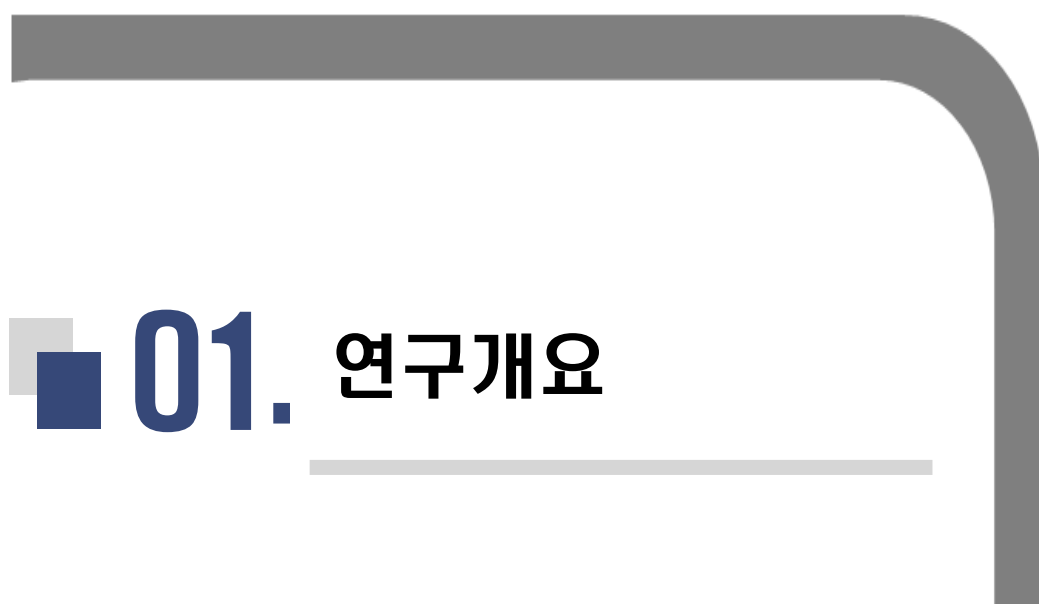
표 목 차

〈표 1-1〉 수도권 및 비수도권 취업자수 및 신설법인수 추이	2
〈표 1-2〉 수도권 및 비수도권 고용률 추이	3
〈표 2-1〉 수도권 및 비수도권 성장 추이	7
〈표 2-2〉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경과	10
〈표 2-3〉 지역별 전략산업 선정현황	12
〈표 2-4〉 재정분권 추진계획안('18.10)	18
〈표 2-5〉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지원체계의 핵심과제	19
〈표 2-6〉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연차별 재원투입 계획	19
〈표 2-7〉 17개 시·도별 발전 비전	20
〈표 2-8〉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성과목표	21
〈표 2-9〉 17개 시·도별 발전 비전	23
〈표 2-10〉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지방정부별 주요 추진계획	41
〈표 2-11〉 국가균형발전포털의 지역발전 부문별 지표	46
〈표 3-1〉 표본기업의 유형 및 업력 현황	50
〈표 3-2〉 지역전략산업별 창업현황	50
〈표 3-3〉 창업자의 성별 및 연령	51
〈표 3-4〉 창업자의 학력 및 전공분야	51
〈표 3-5〉 창업자의 창업 당시 소속	52
〈표 3-6〉 창업자의 창업준비	53
〈표 3-7〉 기타 창업자의 특성	53
〈표 3-8〉 기타 창업자 특성 현황에 대한 4분표(크로스표)	54
〈표 3-9〉 혁신창업기업의 창업동기	55
〈표 3-10〉 창업시 장애요인	55
〈표 3-11〉 창업기술의 주체	55
〈표 3-12〉 혁신창업기업의 기술이전/출자 이유 및 기술활용여부	56
〈표 3-13〉 기술이전(출자)이후 후속지원 정도	56
〈표 3-14〉 혁신창업기업의 정부지원 수혜(참여)현황	57
〈표 3-15〉 정부지원요소별 중요도 응답결과	58
〈표 3-16〉 혁신창업기업의 정부지원에 대한 평가	59

〈표 3-17〉 업력별 정부지원필요시점 응답결과(크로스표)	60
〈표 3-18〉 투자유치 현황	60
〈표 3-19〉 최초 투자유치 소요 기간	61
〈표 3-20〉 혁신창업기업의 경영현황(n=250)	62
〈표 3-21〉 정부지원 여부에 따른 성과 차이	64
〈표 3-22〉 전략산업별 정부지원 현황 및 차이	66
〈표 3-23〉 기술주체별 창업기업 성과 차이	67
〈표 3-24〉 전략산업별 기업성과 차이	69
〈표 3-25〉 성과 결정요인 분석모형 채택결과	70
〈표 3-26〉 연구개발투자 및 성과 결정요인 분석결과	73

그림 목 차

[그림 2-1] 연도별 권역별 GRDP 추이('1985~ '2015)	8
[그림 2-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규모 추이	14
[그림 2-3]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계획의 비전과 전략	15
[그림 2-4] 균형발전상생회의 운영체계(안)	16
[그림 2-5]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운영체계 개념도	17
[그림 2-6]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향	18
[그림 2-7]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비전 및 전략	20
[그림 2-8]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5대 투자분야	22
[그림 2-9] 지역산업정책의 공간적 범위 변화	45
[그림 3-1] 정부지원규모의 도수분포	57
[그림 3-2] 정부지원요소별 중요도의 도수분포	58
[그림 3-3] 정부지원기여도의 도수분포	59
[그림 3-4] 투자유치 규모의 도수분포	61
[그림 3-5] 혁신창업기업의 경영현황 도수분포	62
[그림 3-6] 고용확대 결정에 대한 투자유치 규모의 한계효과	74
[그림 3-7] 고용확대 결정에 대한 업력의 한계효과	74



■ 01. 연구개요

I.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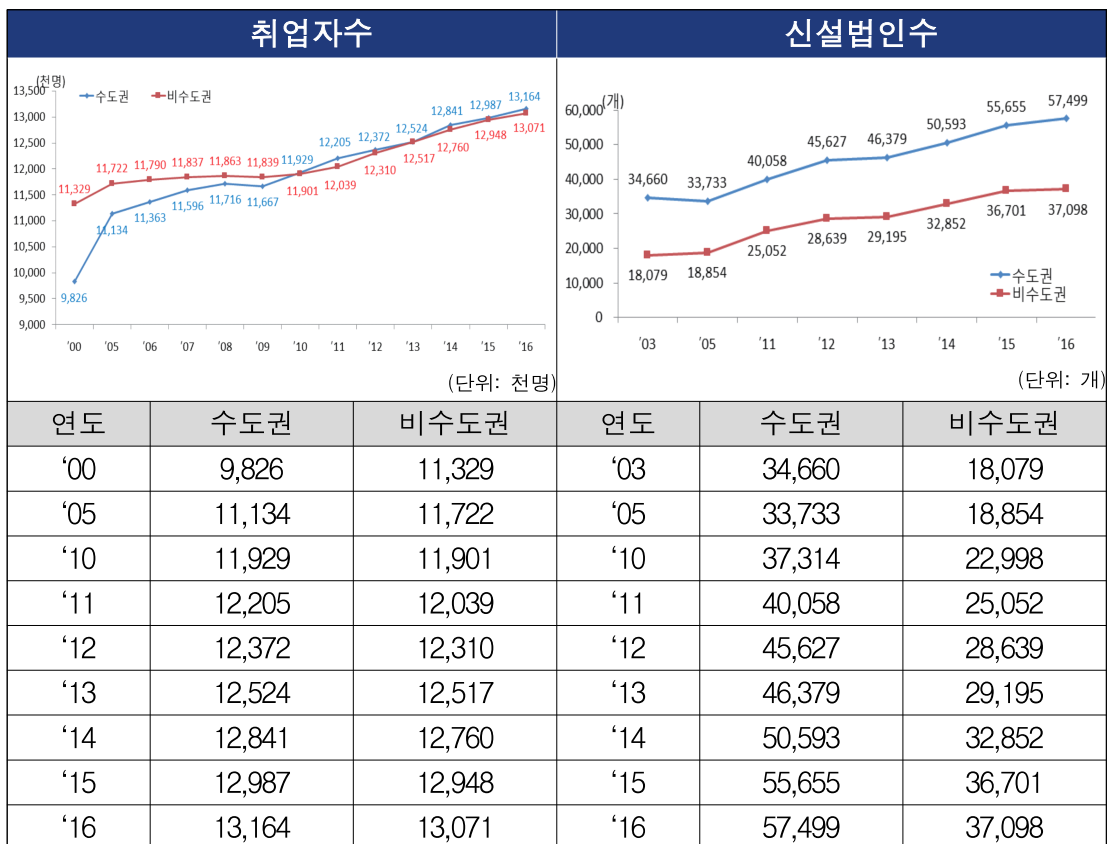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지역산업정책 추진에 따른 실질적 체감성과는 미흡

○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및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

- － 취업자 수도권 비중: (2012) 50.1% → (2013) 50.0% → (2014) 50.2% → (2015) 50.1% → (2016) 50.2%
- － 신설법인 수도권 비중: (2012) 61.4% → (2013) 61.4% → (2014) 60.6% → (2015) 60.3% → (2016) 60.8%

<표 1-1> 수도권 및 비수도권 취업자수 및 신설법인수 추이



자료: 지역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7)

- R&D 중심 지역산업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기업의 혁신역량 상승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결과로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로 연결되는 성과의 선순환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 － 지역발전위원회(2017)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지역산업의 경쟁력 및 혁신역량 강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보고
 - － 반면, 지역특화산업의 핵심목표인 지역고용성장은 같은 기간 수도권의 고용성장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1-2> 수도권 및 비수도권 고용률 추이

(단위: %, %p)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평균
수도권	60.0 (0.2)	60.1 (0.0)	60.1 (0.0)	59.8 (-0.3)	58.6 (-1.2)	59.0 (0.4)	59.4 (0.5)	59.8 (0.3)	60.0 (0.2)	62.0 (2.0)	62.2 (0.2)	62.3 (0.2)	60.28 (0.21)
비수도권	59.3 (0.2)	59.4 (0.0)	59.5 (0.2)	59.3 (-0.3)	58.7 (-0.6)	58.4 (-0.2)	58.7 (0.2)	59.0 (0.3)	59.1 (0.1)	59.7 (0.6)	60.0 (0.3)	60.1 (0.1)	59.27 (0.08)

주: ()는 05년도의 경우 5년간 연평균 증감이며, 06년도부터는 전년 대비 증감임.

자료: 지역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7)

□ (연구의 필요성)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이 긴요

- 수도권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
 - － 비수도권의 성장률을 수도권의 성장률 수준으로 제고시키는 것이 현재의 지역간 경제규모 격차를 축소시켜 균형발전과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임
 - － 지역별 고유의 산업기반을 토대로 한 성장동력 확보가 핵심
- 혁신-창업-일자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및 지속가능 성장 모색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서 창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 * 기존 신규고용 정체 및 고학력 실업 증가로 평생직장이 사라진 현 시대에 창업은 창직(創職)을 의미하여,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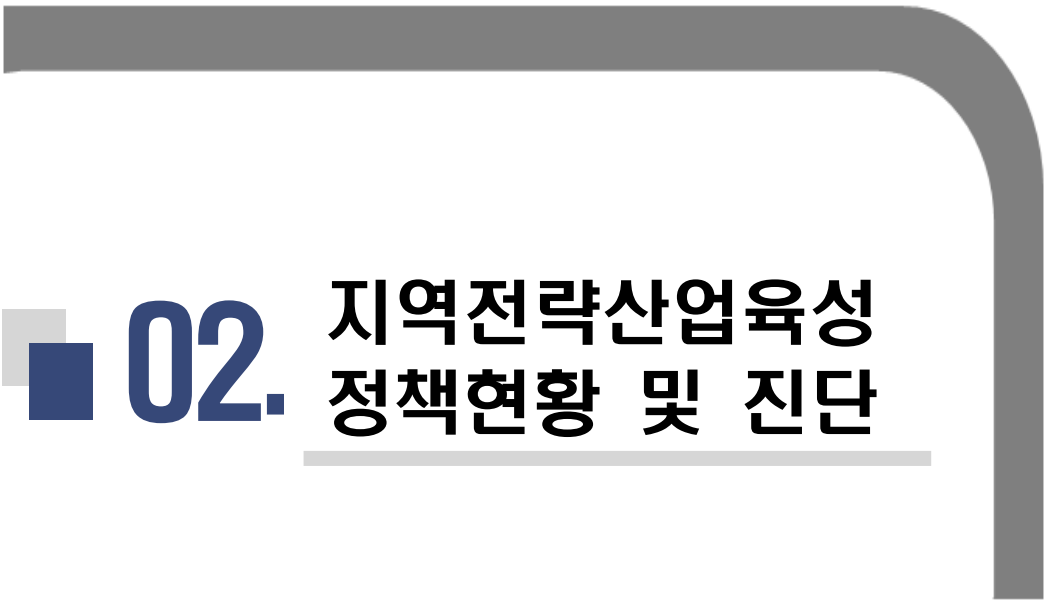
- 문재인 정부도 최근 벤처펀드 확대 및 유니콘기업 육성지원 등을 담은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을 발표하며, 신산업 육성·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확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
 - * 정부 창업지원 예산: (‘16) 2.5조원 →(‘17) 3.7조원 →(‘18) 3.7조원 →(‘19) 3.8조원
 - * 신설법인 수도권 비중: (2014) 61.2%→(2015) 60.9%→(2016) 61.5%→(2017) 60.2%
- 창업기업은 중소·대기업 대비 취약한 경영 기반으로 생존과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
 - * '15년 기준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 27.5%로 주요국의 창업기업 5년 생존율과 비교시 낮음
-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기반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다양한 기술창업 기업들을 갖춘 활기찬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할 지원 사업 필요

[참고] ‘창업’의 개념과 유형

- 일반적으로 사업을 새로이 시작함(Start-up)을 창업이라고 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2.4.15.) 제2조에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자의 자질과 능력’, ‘창업아이디어’, ‘창업자본’, ‘기업가정신’의 4가지 요소가 필요
- 창업에는 소규모 창업(small business creation)과 벤처기업창업(new venture creation)이 있음
 - 소규모 사업은 창업자나 소유주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종속적으로 지배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 (미국 소규모사업법령, 1953)
 - 벤처기업이란 위험성이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을 말함

2. 연구목표 및 내용

-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 측면에서의 특화된 창업지원 정책 수립하고, 동 분야의 창업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 확산방안을 마련으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국내 정책현황 및 사업현황 분석
 - － 국가균형발전정책 개요, 추진경과, 현황
 - － 지역별 전략산업육성사업 추진현황
 - － 지역전략산업육성 정책진단
 - 지역전략산업별 혁신창업기업 성과분석
 - － 지역전략산업별, 유형별(대학/연구소 등) 혁신창업 기업성과 분석
 - －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 효과 분석방안 제안
 -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혁신창업 활성화지원 개선방안 도출



02. 지역전략산업육성 정책현황 및 진단

II. 지역전략산업육성 정책현황 및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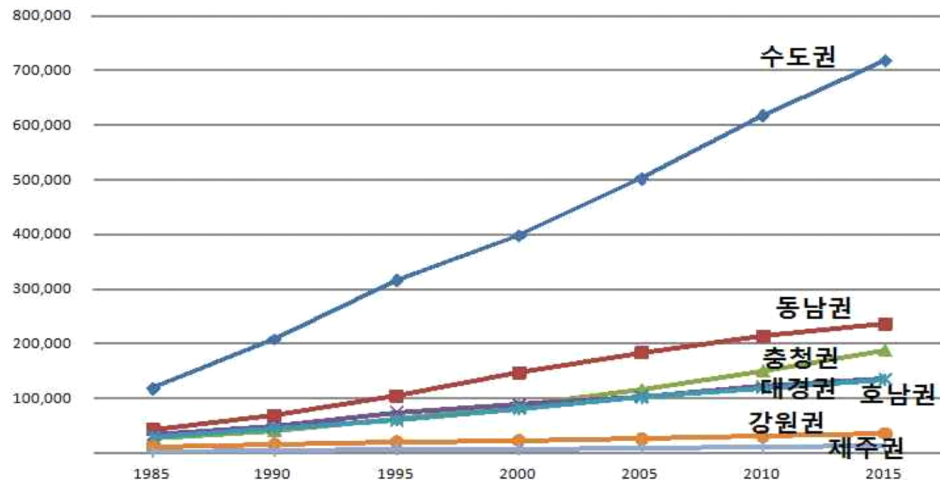
1. 국가균형발전정책 개요 및 추진경과

- (수립 배경) 중앙정부 주도의 다양한 지역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경제력 등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은 지속
 - 중앙정부 주도 방식으로는 지역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기존 지역 문제해결의 경험·지식을 축적한 지방정부 주도의 발전 계획 실행 필요성이 대두
 - － 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된 상황에서 중앙 집권적 운영방식을 지속해서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현실
 - －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 국가적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 주력산업의 침체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혁신역량 미흡으로 자립적 성장·재도약에 한계
 - －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은 2000년대 6% 전후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 연평균 2.3%대로 크게 둔화됨
 - － 같은 기간 5%대 성장률을 보인 수도권의 제조업과 대비된 모습
 - －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클러스터에 대한 성과도 저하되고 있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취약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박재곤 외, 2015)

<표 2-1> 수도권 및 비수도권 성장 추이

구분	GRDP 연평균 증가율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01 ~ '05	4.8%	4.4%	5.5%	6.5%
'06 ~ '10	4.2%	3.7%	6.6%	5.7%
'11 ~ '16	3.2%	2.7%	5.0%	2.3%

자료: 산업연구원(2019)



(십억원, 연도)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8a)

[그림 2-1] 연도별 권역별 GRDP 추이('1985~'2015)

[참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의

□ 국가균형발전의 사전적 의미

- 공간정책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이란 일반적으로 지역 간 사회경제적 제반 여건과 삶의 질이 일정 수준의 균등성을 유지한 상태나 과정으로 정의
 - 지역간 균등화는 지역 간 소득·복지수준 및 실업률 등 정태적 현상의 균등화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성장 소득증가 및 인구성장률 등 동태적 현상의 균등화 포함
-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지역균형이란 지역 간 자본 수익률 투자 효율성이 균등화된 지역 간 평형상태 또는 평형상태로 수렴되는 과정

□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적 의미

-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적 통합성과 통일성을 훼손하거나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저해할 정도의 지역 간 차등이 없는 상태
- 지역마다 입지 및 부존자원과 잠재력이 다르고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의 부문 및 공간적 집중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역 간 사회경제적 조건과 삶의 질적 수준의 획일화된 균등화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음
- Hirschman(1958)은 산업 및 경제성장 과정에서 선도지역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부존자원과 입지적 여건과 함께 유리한 집중화와 전문화의 강력한 힘, 즉 극화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진척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음
 - 지역간 불평등은 일정 수준까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나,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선도지역 등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제동효과(breaking effect)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불균형해소를 위한 정부개입은 필요하고 정당함

□ (추진 경과) 지역발전정책은 2000년대 참여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9년 1월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 (2000년대 이전) 참여정부 이전의 지역정책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특정지역에 대한 정책으로 시행되었음

- 과도한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문제점 보완, 도농 간의 생활여건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 중심
- 특정지역에 국가산업단지 및 수출산업단지 조성, 지방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육성, 생산적·자원절약형 국토형성 및 국토환경 보전 등 추진

○ (참여정부) 2000년대 들어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본격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수립·시행

- 혁신주도형 발전 및 다극분산형 발전을 위하여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
- 테크노파크 및 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등 기술지원기관 설립을 통한 시·도 중심의 산업육성체계 확립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도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
- 2005년 정부 예산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운영하였으며, 포괄보조금 성격의 재원으로 설계

○ (이명박정부) 이명박정부는 기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분산 및 중복 투자에 기인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취약 문제 해소에 중점 노력

-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를 지역발전정책의 상위목표로 제시
-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구축, 지역 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지역 발전,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발전, 지역 간 협력·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
- 3차원 공간전략(초광역개발권-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으로 30대 선도프로젝트(주로 SOC 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광역경제권 인재양성사업 등 추진

○ (박근혜정부) 박근혜정부는 인위적 광역경제권을 탈피하여 지역 자율·협력에 기초하는 지역산업 육성을 도모

- ‘지역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전체 지역산업을 ‘지역산업진흥계획’으로 일원화하여 지역주도의 기획·평가
- 지역이 공감하고, 주민도 체감할 수 있는 고용창출형 산업 육성을 강조
-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원을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고, 특화산업(주력산업 및 연고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지역산업거점기관사업 등 추진
 - * **(특화산업)** 지자체별로 부가가치·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높은 산업을 선정하여 추진
 - * **(협력산업)** 시·도가 자율적으로 경제협력권을 구성하고, 시·도간 협력이 효과적인 대표산업을 선정하여 육성
 - * **(거점사업)**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포괄보조금 확대를 통한 지역자율성 제고

<표 2-2>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경과

시기	배경·목표	주요 정책
1960 ~ 1970년대	- 빈곤의 악순환 탈피 - 자립경제기반 구축 - 공업화 기반 조성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 지방공업개발법 제정(1970) - 공업단지 및 수출산업단지 조성
1980년대	- 성장과 복지의 조화 -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 균형발전	-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1984~1996) - 서해안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
1990년대	- 지방분산형 국토골격형성 - 생산적·자원절약형 국토형성 - 국토환경의 보전 - 통일 대비 국토기반 조성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1994) 8개청 3개 기관을 대전청사로 이전
참여정부 (2003~2008)	- 지역균형발전으로 국민 통합 - 혁신주도형 발전 - 다극분산형 발전 - 관련 제도 확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 수립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및 수정계획(2006~2020)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명박정부 (2008~2013)	- 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 광역화와 연계협력 활성화 - 특화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 (2009~2013)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 지역발전위원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구성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전략
박근혜정부 (2013~2017)	- 지역주민 정책 체감도 제고 - 행복한 삶의 균등한 기회 보장 - 자율적 참여와 협업 촉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4) -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 수립 -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 지역발전위원회, 시도발전협의회 운영 - 지역(행복)생활권 및 경제협력권 도입 - 포괄보조금 확대 등 지역자율성 제고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8b)

□ (지역전략산업 선정) 지역별 특성 및 비교 우위, 국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전략산업을 선정, 이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자생적 발전을 유도

- 지역의 전략산업은 시·도 단위에서 육성이 가능하면서 지역 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산업 위주로 선정
- 시·도가 자기 지역의 집적도·특화도·성장성 등을 분석하여 시도를 대표할 수 있는 중추산업으로 고려
- 14개 지역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을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지역발전위원회 의결로 확정함(2015.12.14.)
 - 각 지역별 2개, 세종시는 1개, 수도권 제외

<표 2-3> 지역별 전략산업 선정현황

지역	강점	선정결과
부산	▪ 우수한 항만·해양레저 인프라 ▪ 관광·선박 등 연관산업 발달	<u>해양관광</u>
	▪ 유비쿼터스 선도도시로, ICT 인프라 풍부 ▪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15~'17)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	▪ 자동차부품 산업 집적 ▪ 자율주행차 투자확대 및 인프라(시험장 등)	<u>자율주행자동차</u>
	▪ 대구 침복단지 운영	IoT 기반 웰니스산업
광주	▪ 현대차·한전을 중심으로 연관기업 집적 ▪ 자동차·에너지 관련 연구·지원기관 집적	<u>친환경자동차</u> (수소융합스테이션)
	▪ 한전(나주), 에너지 연구기관 이전 ▪ 한전·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연계	에너지신산업 (전력변환 및 저장)
대전	▪ 국내 최고의 기술·인력·시설기반 구축 ▪ 연구개발·정보통신 등 연관산업 발달	<u>첨단센서</u>
	▪ 기술집약·선도형 중소바이오벤처 집적 ▪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 집적	유전자의학
울산	▪ 기초화학·전기장비·자동차부품업체 집적 ▪ 세계 최대규모의 울산수소타운 조성	<u>친환경자동차</u> (부생수소 활용)
	▪ 3D프린팅 사업체·종사자 빠르게 증가 ▪ 3D프린팅 관련 기업·연구소 집적	<u>3D 프린팅</u>
세종	▪ 에너지타운·신재생에너지밸리 조성(~20년) ▪ 지역 에너지 5개년 계획 수립('16~'20)	<u>에너지 IoT</u>
강원	▪ 관련 기관 혁신도시 이전 및 기업 집적 ▪ 전국대비 높은 종사자·생산액·수출액 비중	<u>스마트 헬스케어</u>
	▪ 산지 등 풍부한 청정자연환경자원 보유 ▪ '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관광
충남	▪ 중부·서부발전 등 발전사업 집적 ▪ 서산벤처밸리내 태양광 벤처단지 조성중	<u>태양광</u>
	▪ 현대차(완성차·부품) 및 관련 기업 집적 ▪ 자동차 관련 R&D 지원기관 입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충북	▪ 오송 침복단지 등 바이오클러스터 입지 ▪ 보건의료 관련 6대 정책기관 이전	<u>바이오의학</u>
	▪ 화장품 관련 국내 우수기업 집적 ▪ 진천 화장품산업 전문단지조성	화장품

전남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위, 발전량 3위 ▪ 한전(나주) 등 에너지기업 집적	<u>에너지신산업</u> (전력SI, 화학소재 포함)
	▪ 항공우주 관련 인프라 풍부(고흥) ▪ 주력산업인 경량소재 등과 연계 용이	드론(무인기)
전북	▪ 탄소특화국가산단 및 연구개발특구 구축 ▪ 탄소섬유 관련 지원·연구기관 입지	<u>탄소산업</u>
	▪ 농생명 관련 연구·지원기관 다수 입지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중(김제, ~16년)	<u>농생명</u>
경남	▪ 전국 생산업체중 15.7% 입지 ▪ 지능형기계 관련 지원·연구기관 집적	<u>지능형기계</u>
	▪ 국내 항공기 생산의 94% 차지 ▪ KAI·대한항공 등 지원·연구기관 집적	항공산업 (항공부품인증)
경북	▪ 전자부품·모바일 산업기반 집적 ▪ 우수한 인력·R&D 인프라 보유	<u>스마트기기</u>
	▪ 전국 최대 기업집적지(10,423개소) ▪ 자동차부품·뿌리산업 등 연관산업 발달	타이타늄
제주	▪ 다음카카오 등 IT연관기업 다수 입지 ▪ 높은 관광산업 비중(49%)	<u>스마트관광</u>
	▪ 전기차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의 입지조건 ▪ 선도적으로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차인프라

주: 밑줄 친 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산업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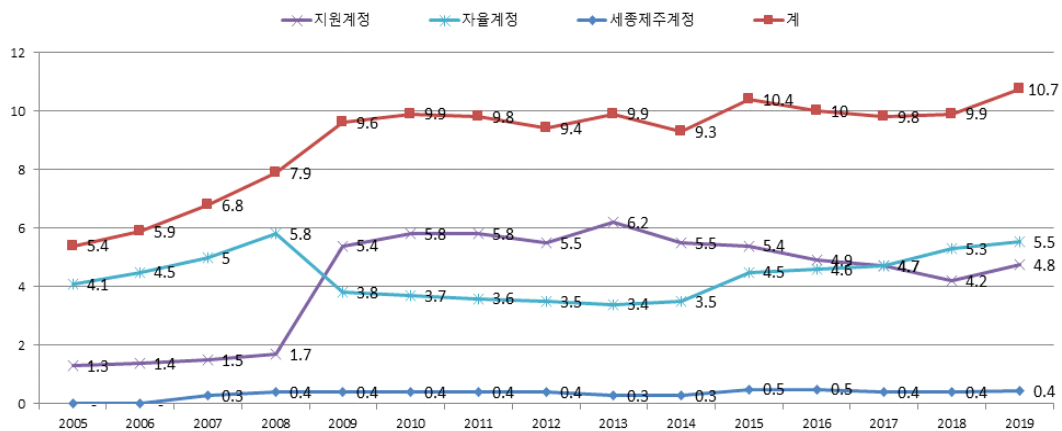
2. 국가균형발전정책 현황

□ (균형발전특별회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편성

○ (추진경과) 균특회계는 균형발전특별회계(‘05~‘0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10~‘14), 지역발전특별회계(‘15~‘18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9~) 순으로 명칭이 변경

○ (예산규모) 균특회계(당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최초 편성되었던 ‘05년 5.4조원이었으며, ‘19년 현재 10.7조원 수준

- ‘05년부터 ‘09년 사이 균특회계 예산규모가 급증하였다가 이후 ‘18년까지 다소 정체되었으나,
- ‘19년 10.7조원으로 전년대비 8천억원이 증가하여 10조원 수준을 돌파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연구원(2019)

[그림 2-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규모 추이

□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문재인정부는 2018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선포

○ (핵심가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분권’, ‘포용’, ‘혁신’ 등 3대 가치를 정립

- (분권) 지역주도 자립역량 축적,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 주도의 맞춤형 문제해결 등
- (포용)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헌법적 가치 실현, 낙후지역

배려 및 도심 재개발에 따른 주민이탈 현상 해결 등 지역간+지역내 균형발전

- － (혁신) 인재-특화산업-일자리의 지역 내 선순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역량 제고, 지역의 다양성 및 창의성을 발현하고 지역 유희자원을 활용한 혁신성장 촉진 등

○ (목표 및 핵심전략)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사람’, ‘공간’, ‘산업’ 등 3대 영역에 대한 핵심전략을 제시

- － (사람)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등으로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실현
- － (공간)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이 거주강소지역으로 변화되는 등으로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구현
- － (산업)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희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으로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달성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2019)

[그림 2-3]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계획의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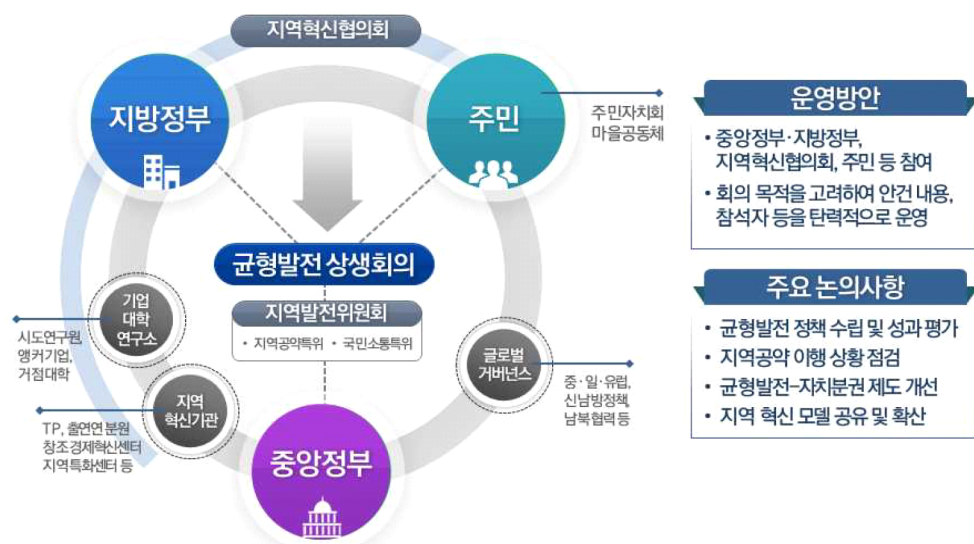
○ (실행력 제고방안)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법령 및 조직, 예산 등의 측면에서 실행력 제고방안을 마련

－ (법령) 『헌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 *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강화를 위하여 개헌시 헌법 전문 및 경제부문 등 규정에 국가의 균형발전시책 의무 강화, 균형발전 방향 구체화 등 반영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역발전위원회 위상강화,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육성, 균형발전 시책 추가 등으로 균형발전 지원 체계 재정립
- *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차원의 혁신도시 발전전략·계획 수립근거 마련,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추진계획 수립·수행 의무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으로 혁신도시 활성화 도모

－ (조직) 균형발전 상생회의 신설, 지역혁신체계 및 글로벌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정부 국정과제와의 융복합 연계 시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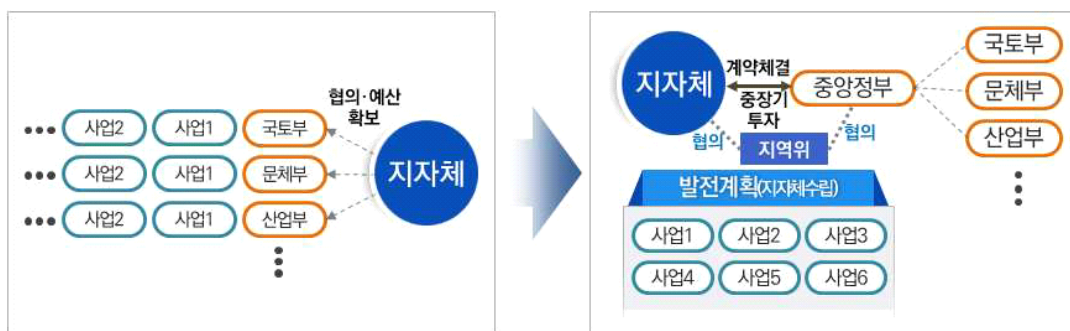
- * 현장 의견수렴 및 중앙-지방 협력을 위한 정례적 소통 채널로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혁신협의회 주민 등이 참여하는 ‘균형발전 상생회의’를 제도화하여, 자립적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
- *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지역혁신지원단’의 지역혁신체계에서 나아가 한-중-일-유럽 지역정책 공조체계 구축 등으로 지역·글로벌 혁신주체를 아우르는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한 협업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위(균형위) 간 지방분권균형발전협의회 신설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8a)

[그림 2-4] 균형발전상생회의 운영체계(안)

- (예산)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 제도 본격 추진,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등
 - * 지특회계의 계정체계 변경, 포괄보조사업의 보조율 상향 조정을 통한 지자체 자율성 제고 및 예산 편성·배분·조정시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 제출권 강화
 - *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계약을 체결하면 포괄 보조형식으로 지원하는 지원계약(포괄지원협약) 도입 추진
 - * 객관지표와 체감지표로 구성된 지역발전정책 사업 평가·환류의 과학적 접근 도구로서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이에 근거하는 재정사업 지원지역 선정, 차등 자원배분·감면방안 마련 등을 통한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제고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8a)

[그림 2-5]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운영체계 개념도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으로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2018~2022)』 발표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과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을 기초로 5년간(‘18~ ‘22)의 국가균형발전 추진과제를 구체화
-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지원체계로서 6대 핵심과제를 선정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기반 조성,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R&D 사업 등 추진
 -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지역여건을 종합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는 지역차등지원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 간 격차 완화 모색
 -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 시설·공원 등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SOC 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지원

- **(지역발전투자협약 본격 추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과 지자체간 협의·조정 후 협약을 체결·추진하는 지방분권형 지역발전사업 모델 자리매김 추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을 토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추진
 - * 지방세 확충과 연계,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20년에 3.5조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
 - * 지방정부로의 기능이양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균형위가 참여하는 기능 조정 T/F를 구성·운영

<표 2-4> 재정분권 추진계획안(‘18.10)

구분	1단계		2단계
	‘19년	‘20년	‘21 ~ ‘22년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율 +4%p(3.3조원)	지방소비세율 +6%p	국세·지방세 전환 등(12조원+ α)
기능이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3.5조원 내외 이양	
국세 : 지방세* (‘16년 76:24)	75:25	74:26	70:30

* 기타 교부세 감소분, 소방직 지원 등 감안하여 산출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2019)

- **(지역혁신체계 구축)** 자립형 지역발전 촉진을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혁신 주체·활동을 결집하여 지역 주도의 발전 전략 수립 및 사업 발굴 추진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8조)에 의거, ‘18.10에 각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완료
 - *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혁신 사업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개편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2019)

[그림 2-6]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향

<표 2-5>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지원체계의 핵심과제

구분	핵심과제	관계기관
균형 발전 지원 체계	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②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균형위, 기재부 등
	③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대	국조실, 국토부, 문체부 등
	④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협약) 본격 추진	균형위, 국토부 등
	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균형위, 기재부 등
	⑥ 지역혁신체계 구축	균형위, 행안부, 산업부 등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2019)

- 계획기간 동안 총 174.8조원(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제외)의 재원투입 계획
 - － 부문별 핵심과제에 따른 과제에 153.1조원, 시·도 자체사업에 21.7조원 투입
 - － 국비 64.6%(112.9조원) 및 지방비 24.1%(42조원), 민간투자 11.3%(19.8조원) 등의 비중으로 구성

<표 2-6>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연차별 재원투입 계획

구분	총계(비중)	'18	'19	'20	'21	'22
총투자액	174.8(100)	26.9	36.1	35.8	38.6	37.5
국비	112.9(64.6)	18.9	22.3	24.1	24.2	23.4
지방비	42.0(24.1)	6.6	8.6	9.0	9.1	8.8
민간 등	19.8(11.3)	1.4	5.2	2.7	5.2	5.3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2019)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문재인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기초를 바탕으로 향후 5년('18~ '22)의 지역과학기술육성의 목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

- (수립배경)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하여 17개 지방정부와 매 5년 수립하는 범부처 법정계획
 -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00년부터 ‘17년까지 18년간 추진되었음에도 지역과학기술정책이 지역산업기술에 비해 지역 차근이 미약하고,
 - －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의 자립성장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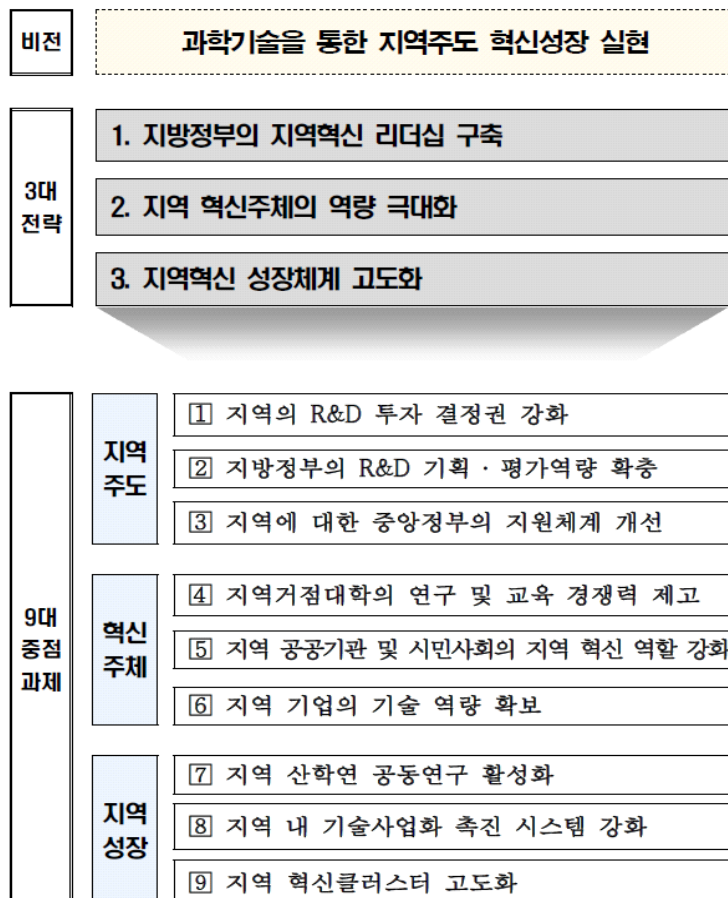
활성화에 있어 R&D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지방R&D 수행 역량은 여전히 미흡

<표 2-7>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추진경과

구분	제1차 종합계획 (‘00 ~ ‘04)	제2차 종합계획 (‘05 ~ ‘07)	제3차 종합계획 (‘08 ~ ‘12)	제4차 종합계획 (‘13 ~ ‘17)
비전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 실현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국가균형 발전 실현	과학기술로 만들 어가는 행복한 지역 사회
주안점	인력, 사업, 인프라 등 지방과학기술 기반 구축	RTRM에 기초한 전략·특화기술 개발	지역연구개발 주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핵심기술개발 촉진	지역 R&D 추진 체계 개선 및 재정비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 (수립목표 및 과제)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을 위하여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 추진



자료: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2018)

[그림 2-7]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비전 및 전략

- (기대효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R&D를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의 혁신생태계 구축 기대
 - － 과학기술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식 제고 및 투자 확대 촉진
 - － 지역 내 산-학-연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혁신조직과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활동 활성화 유도
 - － 혁신성고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마련

<표 2-8>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성과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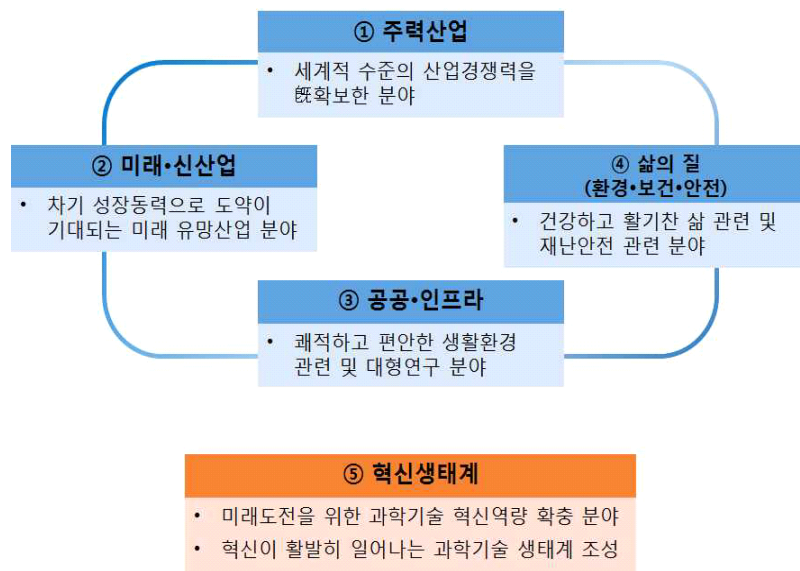
구분	성과지표	AS-IS(현재)	To-BE('22)
지역 주도	○ 17개 지방정부 총 예산 중 과학기술관련 예산 연평균 비중	1.07%('16)	1.63%
	○ 중앙정부 지특회계 연구개발비 증가율 (최근 3년간 평균비율)	7.4%('15)	10%
	○ 지방정부 R&D전담기관 법적 기반 마련	3개 지방정부('16)	17개 지방정부
	○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연평균 개최횟수	1.3회('16)	4회 이상
혁신 주체	○ 지역대학 연구개발투자 회수율	1.38('15)	1.5
	○ 지역대학 산학협력지수(서울·수도권 제외)	131.1('15)	140
	○ 출연연의 지역기업수요 지원 건수	1,298건('16)	2,500건
	○ 지역기업 연구개발인력 수 (서울·수도권·대전 제외)	75,069명('15)	100,000명
	○ 지역 이노비즈 신규 지정 수	1,335개('16)	2,000개
지역 성장	○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수	7개('16)	15개
	○ 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수	4개('16)	10개
	○ 연구원 1인당 산학연 협력 논문 수	0.046건('14)	0.5건
	○ 정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평균 건수 (서울·수도권 제외)	836건('15)	1,000건

자료: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2018)

-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정부는 2019년 2월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하였으며, 기술영역에 대한 4개 투자분야와 함께 ‘혁신생태계’ 분야를 추가하고 ‘지역주도의 R&D 역량 강화 지원’을 강조

- 과기정통부는 정부R&D 예산 2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으로 배분 되도록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

-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위한 정부R&D 투자 예측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정부R&D의 목적을 고려한 투자분야 설정 및 투자전략 도출
 - － (투자분야)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토대로 40개 기술군에 대해서 ① 주력산업, ② 미래·신산업, ③ 공공·인프라, ④ 삶의 질 등 4개 투자분야를 설정하고, 주요 정책영역을 고려하기 위하여 ‘혁신생태계’ 분야를 추가하여 총 5개 투자분야를 설정
 - － (투자전략) 기술중심의 4개 투자분야에 대해 민간R&D 투자규모와 산업화 속도를 기준으로 세부 투자전략을 제시
 - － (혁신생태계 조성) 지역 자체 혁신역량 확충 및 지역산업 연계 강화 등 지역주도의 R&D 생태계 구축으로 혁신기반 확대를 통해 혁신생태계의 핵심인 연구주체의 혁신활동을 뒷받침
-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과 예산배분·조정시 투자전략 반영, 부처별·다부처 R&D 중장기 계획 수립시 연계, 투자전략을 반영한 사업 기획 및 R&D 과제 추진 등 이행 예정
 - － 투자전략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추진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투자방향 수립
 - － 각 부처별 중장기계획 수립 시 다부처로 협력 및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방향성 반영
 - － 동 투자전략에서 제시된 유망기술분야에 우선 투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정부R&D 예산 20조원 시대의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그림 2-8]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5대 투자분야

3. 지역별 전략산업육성사업 추진현황

- (국가균형발전 계획) 17개 시·도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비전 및 발전계획을 수립,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을 주도·실현하고 있음
-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의 3대 전략(사람·공간·산업)에 따른 과제, 지역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를 발굴·반영함
- 지역의 연계·협력에 기반한 지역자산의 효율적·통합적 활용, 한반도 신경계지도 구상 이행 등을 위해 균형발전 역량 강화

<표 2-9> 17개 시·도별 발전 비전

시·도	비전
서울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부산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대구	“삶이 여유롭고 일자리가 생겨나는 열린 대구”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경제 중심도시 인천”
광주	“정의롭고 풍요로운 도시, 광주”
대전	“더불어 행복한 미래도시 대전”
울산	“동북아 산업혁신 선도도시”
세종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경기	“어디에서나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강원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충북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강호축의 중심 충북”
충남	“환황해권시대, 포용적이고 더 행복한 충남”
전북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천년 전북”
전남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경북	“새바람, 행복 경북!”
경남	“제조업과 공간의 혁신, 청년이 모이는 경남”
제주	“제주도민이 행복한 공존과 청정의 균형도시”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2019)

3.1 서울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 핵심목표

-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 발전의 내실화 추구
- 모든 지역을 배려하는 권역별 균형발전과 수도권·지방상생발전 추구

◆ 분야별 과제

< (산업) 함께 잘사는 배려 서울 >

-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조성, G밸리 활성화, DMC 활성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운영, 서울창업허브 운영, 로봇과학관·노원영상미디어센터 건립
- 지역활력의 중심이 되는 지역 유희공간
사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어울림플라자 건립, 한강핵심산업 육성 등

< (사람) 매력과 젊음이 넘치는 행복 서울 >

- 청년과 지역이 활기찬 청년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조성, 청년활동보장,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대학 일자리 협력사업 지원
-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즐거운 매력도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西서울 미술관 건립,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한양도성 보수정비, 풍납토성 복원,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서울 글로벌 마케팅
-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치매안심센터, 어르신 일자리

< (역내불균형) 어디서나 살기 좋은 서울 >

- 강남·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캠퍼스타운 조성, 창동·상계 신경계중심지 조성, 마곡 R&D 조성,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시 경계 12개 지역 관문도시 조성, 기관이전

◆ 핵심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18	2022	증감
1인당 GRDP	백만 원	36.2	45.0	7.8
일자리 수	천 명	5,079	6,065	986
행복지수(서울서베이)	점	7.0	8.2	1.2
노후주택비율	%	14.7	13.0	1.7
사업체 창업률	%	12.4	14.0	1.6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	%	40.6	30.0	10.6

3.2 부산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 핵심목표

- 시민과 함께 실질적인 동북아 해양수도의 비전 완성
- 정의로운 시정으로 차별 없는 사회와 희망이 있는 도시

◆ 분야별 과제

< (사람) 부산시민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건강 도시 >

- 맞춤형 청년희망 정책으로 지역인재 일자리 창출
청년 희망일자리 확충 추진, 청년 프로그램·활동 지원
- 해양·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콘텐츠 관광 특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낙동강 하굿둑 개방, 유라시아 컬처 플랫폼 기반 조성
- 행복한 노후·차별없는 복지로 시민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조성, 생애단계별 주거복지 책임제 구현,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 (공간) 활력 넘치고 골고루 잘사는 사람 중심의 부산 재창조 >

- 도시형 해양산업 육성으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부산어촌 상상아지트 구축, 기장 칠암항 오감체험 어촌조성사업
- 가치실현·주민중심의 도시재생으로 도심뉴딜 실현
부경수자원공사 설립으로 수리 자치권 확보, 북항재개발 연계 도심재생, 노후주거지 빈집재생 활성화
- 서민·청년 주거 안정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공동체 조성
사회주택사업 추진,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 (산업) 좋은 일자리가 풍성한 경제 혁신도시, 부산 >

- 혁신도시 기능 확대로 부산형 스마트시티 실현
STEM 빌리지 조성, 부산EDC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 4차산업혁명 대응 ICT 중심의 지역산업 혁신 거점 구축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센터 설립, ICT융합 치의학산업 기반 육성
- 유희자산 활용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건강한 도시재창조
신림복지단지 조성, 농업기술센터 복합개발

< (역내불균형) 부산광역시 동서간 격차 해소전략 >

- 교육·복지 등 생활복지 격차 해소
- 동서 기초생활서비스 격차 해소

◆ 핵심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18	2022	증감
1인당 GRDP	백만 원	36.2	45.0	7.8
일자리 수	천 명	5,079	6,065	986
행복지수(서울서베이)	점	7.0	8.2	1.2
노후주택비율	%	14.7	13.0	1.7
사업체 창업률	%	12.4	14.0	1.6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	%	40.6	30.0	10.6

3.3 대구 “삶이 여유롭고 일자리가 생겨나는 열린 대구”

◆ 핵심목표

-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사회적 인프라 확충 및 거점 개발
- 신성장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

◆ 분야별 과제

< (사람) 모두가 함께 누리는 대구의 삶 >

- 청년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경제사회환경 조성
대구경북 협력 지역혁신인재 양성,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연·정 컨소시엄 구축,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청년 사회 진입 지원
- 영남권 문화 거점 기능 확대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대구대표도서관·간송미술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도시 지정 활성화, 달성역사공원 조성
- 사회기반서비스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원 설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250만 대구시민 안전보험 도입

< (공간) 활력이 넘치고 살고 싶은 메트로폴리탄 대구 >

- 대구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 재생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 대구 대도시권 중심성 강화
서대구 고속철도역 및 일반복합환승센터,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대구경북상생협력사업

< (산업)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구산업 >

-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안심 혁신의 산실, 대구혁신도시
대구경북첨복단지 국가첨단의료허브로 육성(뇌연구 생태계 구축,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스마트혁신 기반 구축
5대 新성장산업 육성(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로봇산업 메카, 세계적 메디시티, 글로벌 청정에너지 자족도시),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 SW산업 육성 지원

< (역내불균형) 대구광역시 역내 균형발전 >

- 불균형 해소 거점 마련
서대구 대개발(서대구역·일반복합환승센터 건설, 하폐수 처리시설 통합지하화, 서대구 염색공단 친환경 현대화),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 맞춤 정책을 통한 지역 내 불균형 완화
칠곡·성서 부도심 개발계획 수립, 대구대공원 개발, 도시철도 역세권 용도지역 재지정, 앞산 관광 명소화, 경북도청 등 공공기관 이전 후적지 개발

◆ 핵심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18	2022	증감
1인당 GRDP	백만 원	20.15	24.34	4.19
일자리 수	천 명	929	1,050	121
여가만족도	%	21.70	25.00	3.30
1인당 도시공원 면적	m ²	6.38	7.50	1.12
고용률	%	58.80	60.80	2.00
전국대비 벤처기업 비중	%	4.80	6.80	2.00

3.4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경제 중심도시 인천”

◆ 핵심목표

- 혁신경제 기반 평화경제 중심도시 실현
- 민관협치를 통한 생활과 문화 복지 공동체 실현

◆ 분야별 과제

< (사람) 생활 속에서 문화와 복지를 누리는 인천시민 >

- 지역맞춤형 청년 인재 양성과 사회진출 활성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교육혁신지구 운영,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 격차없는 문화향유와 특색있는 지역관광 활성화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부평음악도시 조성사업, 경인축 문화역사자원네트워크 조성사업
- 생활밀착형 지역맞춤 보건·복지체계 구축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복지공동체 “인천보듬지킴이”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 (공간) 주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행복공간 >

- 해양·생태기반의 지속가능하고 매력있는 농어촌 만들기
지역활력화 작목기반구축,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원도심 재창조
‘더불어마을’사업, 도시재생 뉴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전담부시장제 도입 및 조직 신설
-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개선을 통한 거주강소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접경지역(강화·용진군)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마을기업 육성

< (산업) 혁신성장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인천경제 >

- 인천경제자유구역 전략분야 산업생태계 조성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송도 녹색기후 금융도시 조성, 국제회의복합지구 클러스터 조성
-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노후산단(남동·부평·주안) 구조고도화,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스마트공장 확산
- 서해 평화수역 조성 및 경제협력 활성화
백령도 공항 건설,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수산자원관리 기반시설 공동 구축

< (역내불균형) 경제자유구역과 상생하는 불균형 해소전략 >

-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원도심 경제 재생기반 구축
남동공단 혁신창업공간 조성, 송도·남동 B-MEC(Bio-Medical Engineering Creative)벨트 조성

◆ 핵심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18	2022	증감
1인당 GRDP	백만 원	27.8	30.8	3.0
일자리 수	천 명	1,005	1,151	146
대학생 지역 내 취업률	%	30.2	40.0	9.8
인천형 도시재생 지원사업	개소	10	50	4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	개소	1,024	1,500	476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수	개소	1,678	2,702	1,024

3.5 광주 “정의롭고 풍요로운 도시, 광주”

◆ 핵심목표

- 에너지·친환경자동차·문화산업 특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추진
- 국토서남권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공동체를 포용하는 지역 구축

◆ 분야별 과제

< (사람) 품격있는 시민들이 더불어 사는 광주 >

-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및 취업연계를 위한 광주형 교육생태계 조성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에너지신산업인재 양성
- 고부가가치 문화예술 생태계 및 남도문화 복합관광지대 조성
첨단실감콘텐츠제작 클러스터,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광주관광기구 설립 등
-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공동체 육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

< (공간) 명품 친환경 재생도시 광주 >

-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매력있는 친환경 도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확대, 걷고 싶은 명품 가로숲길 조성
- 쇠퇴지역 도시재생과 도시내부 연결을 통한 광주경쟁력 강화
군공항부지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임동일대 스포츠·문화거점 조성, 북부순환도로, 상무~첨단산단도로 개통
-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확충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안전도시 광주실행계획 수립, 청년참여 마을기업 발굴, 마을자산 활용형 일자리 육성

< (산업) 미래첨단산업 스마트 플랫폼 광주 >

- 에너지 중심 새천년 혁신 거점 조성
광주국가혁신클러스터, 산학연 유치 지원, 혁신도시 오픈랩 조성
- 미래 신산업이 융성하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전장부품 기반 구축, 자율주행커넥티드카 부품산업 육성, 멀티터미널 직류배전 시스템 개발·실증, 수소기반 산업생태계 구축,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및 재정비 지원, 스마트 가전·디지털생체의료 육성
- 국공유지 토지자산의 녹색자원화 추진
무등산권 지질공원 누리숲길·미래숲 조성 및 관리

< (역내불균형) 자치구간 격차없는 광주 >

- 지역내 고르게 잘사는 도시를 위한 자치구간 격차 해소
일자리 이모작 사업 활동 공간 조성, 제2 노인복지타운 구축, 국공립학교 설치 및 유치, 육아지원플랫폼 활성화, 광주역 도시재생사업과 아시아문화전당 권역 연계

◆ 핵심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18	2022	증감
1인당 GRDP	백만 원	23.9	27.0	3.1
일자리 수	천 명	603	660	57
여가활용만족도	%	27.9	30.5	2.6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면적	천 m ²	6.2	6.3	0.1
혁신도시인근 신규사업체수	개소	190	500	310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체 비중	%	0.6	2.1	1.5

3.6 대전 “더불어 행복한 미래도시 대전”

◆ 핵심목표

- 원도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내 불균형 해소 추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 분야별 과제

< (사람)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

-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지원 시스템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도시
대졸·특성화고 졸업자 지역내 취업비율 55% 달성, 지역내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2.2% 이하 개선
- 품격있는 생활문화 / 건강한 여가생활 환경 조성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3.9개, 공공체육시설 600개 확충
- 차별 없는 복지체계 구축,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노인 천명당 여가 복지시설 수 3.50개 달성, 중장년새로시작재단 설립,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시립의료원 설립 추진,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 (공간) 생명이 숨쉬는 생태도시 >

- 생명이 숨쉬는 도시, 자연이 살아있는 즐거운 생태도시 조성
인구대비 생태공원 확보 비율 확대, 2대 도심 공원 조성, 2030 가정용 전력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50% 달성,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6.3MW 설치, 미니태양광 38천 가구 설치
-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친환경 교통네트워크 구축
대전역·대덕특구·세종시 연계 대중교통체계 구축

< (산업) 미래산업이 꽃피는 도시 >

- 4차산업혁명의 기술플랫폼이 조성되는 미래도시
과학기술융합연구센터조성 등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추진방안 마련, 유전자 의약산업 허브 구축
- 기업성장 기반 조성
예비사회적기업 55개 육성,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 200개 유치, 2000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5대 창업 플랫폼 조성

< (역내불균형)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성장 도시 >

- 원도심과 신도심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성장 도시
균형발전재원마련(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드림하우징 3천호 공급

◆ 핵심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18	2022	증감
1인당 GRDP	백만 원	23.4	30.0	6.6
일자리 수	천 명	597	710	113
대졸및특성화고졸업자지역내취업률	%	51	55	4
인구10만명당 복지시설 수	개소	11.4	14.0	2.6
제조업사업체수	개소	7,738	8,538	800
고용률	%	60.4	65.5	5.1

3.7 울산 “동북아 산업혁신 선도도시”

◆ 핵심목표

- 창의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선순환체계 구축
- 주력산업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기반 구축

◆ 분야별 과제

< (사람) 시민이 머물고 싶은 품격 있는 행복 도시 >

-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과 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구축
울산형 열린 시립대학(공동캠퍼스) 설립 및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선도전문대학 육성
- 지역자산을 활용한 매력있는 문화·관광 산업기반 구축
반구대암각화 보존,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및 백리길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 울산생태관광센터 설치, 부울경 관광네트워크 구축, 국립 미래과학관 건립, 문화도시 지정 활성화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울산 공공병원 건립 지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 울산형 출산장려 사업 추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보(보건·의료·보육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노인일자리 확대

< (공간) 도시의 활력이 넘쳐 찾아가고 싶은 매력도시 >

- 도심과 외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 사통팔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물류망 확충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 양산~울산간 광역철도(검토)

< (산업) 신산업을 선도하고 일하고 싶은 첨단산업도시 >

- 혁신성장거점 구축으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 혁신기반 구축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그린자동차 부품 실용화·실증 지원, 바이오화학소재공인 인증센터 구축, 3D프린팅 국립연구원 설립 및 R&D 지원, 동북아 에너지허브 추진 (오일·가스·수소·신재생에너지), 해수전지 기반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 추진, 동남대기환경청 건립, 울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석유화학공단 긴급안전진단 및 개보수 지원
- 산림 및 해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산림일자리발전소 연계 산촌특구사업 유치,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 육성, 울산항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 핵심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18	2022	증감
1인당 GRDP	백만 원	61.0	65.3	4.3
일자리 수	천 명	523.3	630.7	107.3
청년 취업자수	천명	76.5	78.6	2.1
총가구 대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3.80	3.40	-0.40
1인당 지역총소득(GRNI)	백만 원	52.7	57.4	4.7
1인당 연구개발투자액	백만 원	120.0	140.0	20.0

3.8 세종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 핵심목표

-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기관 이전 및 인프라 확충
- 시민주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 분야별 과제

〈(사람) 삶의 질이 높은 품격도시〉	
○ 지역대학 지원과 인재양성을 통한 도시 성장동력 확보	
○ 지역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김종서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 디지털세종 문화대전 편찬	
○ 인구특성을 고려한 보건·복지 지원으로 시민 삶의 질 제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공간) 조화롭게 발전하는 균형 도시〉	
○ 농가소득 증대와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도농 연계 강화 세종형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조성, 복숭아·배를 테마로 ‘도도리파크’ 조성,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기능 활성화	
○ 시민주권 강화와 균형발전 선도모델 창출 금강르네상스 조성사업,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 읍면동 주민공동체에 조례·규칙 제안권 부여	
〈(산업) 지속가능성을 갖춘 스마트도시〉	
○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건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세계행정수도 국제네트워크 구축	
○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자족성 확보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조성, 세종시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 조성, 마이스산업 육성기반 조성, 청년창업플랫폼 구축	
○ 유흥자산 발굴·개발을 통한 세종시 맞춤형 개발 유도 세종형 공유하우스 보급 확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세종시 둘레길 조성	
〈(역내불균형) 세종시 지역 내 불균형 완화〉	
○ 노후시가지 정비	
○ 주거·생활여건 개선 읍면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스마트홈 지원사업	
○ 도·농 상생발전 추진 로컬푸드 인프라 구축사업,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확대,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핵심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18	2022	증감
1인당 GRDP	백만 원	35.1	38.1	3.0
일자리 수	천 명	104	136	32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수	개소	5.4	6.0	0.6
노후주택비율	%	8.40	6.40	2.00
벤처기업수	개소	88	124	36
취업자	천 명	144	201	57

3.9 경기 “어디에서나 삶의 질을 끌고루 누리는 경기도”

◆ 핵심목표

- 지역 중심, 사람 중심의 즐겁고 안전한 살고 싶은 경기도 지향
- 삶의 보편적 권리를 신장하고 혁신과 공정의 경기도 구현

◆ 분야별 과제

< (사람) Work&Life Balance, 희망과 행복의 경기도민 >

- 일과 삶이 즐거운 배움의 창 조성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 서비스(GSEEK) 재편·내실화
- 문화·관광 풍성한 경기도 구축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역사문화 생태관광코스 개발,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 서해안-DMZ-동부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 세계정원 경기도든 조성, 동두천 산림복지단지 조성
- 도민의 기본복지 증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년배당 실시, 사회적 일자리 확대, 3050 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등

< (공간) Vitality, 멋과 활력의 경기도 >

- 농산어촌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친환경바이오팜 R&D 강화, 스마트팜 보급, 농촌자원융복합 지원, 농업부문 기초연구 강화
- 살고 싶은 우리 동네 추진
규제등급에 기초한 지역지원, 주민공동체 활동기반 조성,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 모두가 편리한 교통체계 마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수도권 급행열차 확보 추진

< (산업) Innovation, 공정과 혁신으로 신명나는 일터 >

- 4차 산업혁명 거점 확대 및 강화
스타트업과 기술창업·재창업 지원 확대, 지역생활 친화형 산업단지 개발, 글로벌 4차산업 혁신벨트 구축, 지식첨단형 노후산단 활성화
- 서해안 성장거점 마련
평택항을 해양운송 거점으로서 기능 강화

< (역내불균형) Peace, 평화시대, 신경제지도 중심지 >

- 신성장 중심 경기북부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확대 추진, 통일경제특구 조성, 파주 출판단지 복합문화콘텐츠 클러스터 활성화
- 건강하고 안전한 생태환경 조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업사이클 산업기반 조성, 진위 안성천·평택호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규제개선
- 공정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 구축
지역화폐 확대 발행, 생활기술학교 확대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행복마을관리소 설립

◆ 핵심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18	2022	증감
1인당 GRDP	백만 원	29.5	34.5	5.0
일자리 수	천 명	4,803	5,403	600
청년배당 지급 인원	천 명	0	687	687
개발이익 도민환원 사업대상지발굴 및 추진	개소	0	4	4
평택항 배후물류단지 건설	%	0	80.0	80.0
스마트공장 보급	건	500	3,000	2,500

3.10 강원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 핵심목표

- 행복공동체 강원, 포용·상생발전 강원, 지역경제·혁신성장 강원
- 지속 가능한 도민 삶터와 균형공동체 실현

◆ 분야별 과제

< (사람) 행복하고 건강한 강원도민 >

- 강원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생태계 구축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 올림픽 문화유산 활용한 융·복합 문화관광 육성
강호축 국민쉼터 조성, 스마트 생명·관광산업, After 평창 프로젝트 검토, 동계올림픽특구개발
- 파스한 보건복지 실현과 도민 삶의 질 향상
의료·분만취약지 지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 (공간) 매력 있고 활력 있는 강원공동체 >

- 풍요로운 삶터 강원 신농산어촌 만들기
농촌 신활력플러스, 농촌중심지 활성화,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 강원형 도시재생 뉴딜 및 북방시대 선도광역교통망 확충
도시재생사업, 광역도로건설, 원주·여주간 철도 조기개통
- 평화지역 등 활력공동체 타운 실현
평화지역(접경지역) 개발지원, 평화누리길사업

< (산업) 일자리·투자가 일어나는 강원혁신 >

- 건강·생명·관광 지식기반 성장거점 강원원주혁신도시 실현
스마트 정주여건 개선, 강원원주혁신도시지원센터설립
- 강원 지역산업 혁신 및 혁신거점 조성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수열에너지클러스터 조성, 헬스케어 부론 국가산업단지 조성, 평화산업단지 조성
- 강원지역 유희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및 일자리 창출
강원 산촌 활성화, 강원어촌뉴딜 300, 동해항 3단계 개발

< (역내불균형) 강원도 지역 내 불균형 완화 >

- 강원 신균형발전(I벨트) 구현: 평화지역-강원내륙-강원남부
- 시군간 격차 해소 및 소멸지역 통합지원
- 강원 지역균형발전 선도모델사업 추진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 핵심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18	2022	증감
1인당 GRDP	백만 원	27.4	34.2	6.8
일자리 수	천 명	597	704	107
의료 및 취약자 지원(누적)	개소	2	8	6
도시재생사업(누적)	개소	7	26	19
사업체수(누적)	개소	141,394	151,853	10,459
고용률	%	61.00	64.00	3.00

3.11 충북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강호축의 중심 충북”

◆ 핵심목표

- 강호축 육성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기반 구축
- 청주권·비청주권 불균형 해소 및 지역체검형 특화사업 발굴

◆ 분야별 과제

< (사람) 품격있고 행복한 충북도민 >

- 수요(일자리)·공급(인재) 맞춤형 연계 생태계 조성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전문대학 육성
- 고령화시대 누구나 행복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9988 행복나눔,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문화향유권 보장 및 역사·문화·자연자원의 가치창출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 (공간) 하나되어 어울리는 충북 공동체 >

- 강호축 육성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강호선 구축(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동서간 연계 발전을 위한 동부벨트 구축(백두대간 순환 도로망 연계성 강화)
-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거주 강소지역 육성
농촌 신활력 플러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생산직 일손봉사 운영 지원
- 건강한 스마트 도시 육성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 뉴딜(중심시가지, 주거지지원, 일반근린 등)

< (산업) 특색있게 살아나는 지역혁신 >

-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충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사업 추진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 K-뷰티 허브 구축, ICT 융복합 활성화 기반 구축
- 지역내 유희자산의 활용을 통한 균형발전 추진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 (역내불균형) 지역내불균형 해소전략 >

- 도내 권역간 불균형격차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세포 확충형 모자이크 프로젝트 추진

◆ 핵심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18	2022	증감
1인당 GRDP	백만 원	27.4	34.2	6.8
일자리 수	천 명	597	704	107
의료 및 취약자 지원(누적)	개소	2	8	6
도시재생사업(누적)	개소	7	26	19
사업체수(누적)	개소	141,394	151,853	10,459
고용률	%	61.00	64.00	3.00

3.12 충남 “환황해권시대, 포용적이고 더 행복한 충남”

◆ 핵심목표

-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플랫폼경제에 기반한 포용성장 선도지역
- 선순환 일자리와 복지, 삶터가 보장되는 더 행복한 충남도민

◆ 분야별 과제

< (사람)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충남인 >

- 충남지역 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구축
지방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강화, 지역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소재 학교지원
- 문화격차 해소 및 고유자산 활용 문화관광 육성
지역간문화격차 해소,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백제역사유산 세계도시 육성, 충남의 문화·역사·관광자원 활용 극대화
-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충남형 보건복지체계 구축
충남형 선도적 복지구현(아기수당 도입),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교통체계 개편

< (공간) 쾌적하고 풍요로운 충남인의 삶터 >

- 매력있고 활력 넘치는 풍요로운 농산어촌
농수산 기반 지역특산물 명품화, 직불금 강화 등 농민 소득 향상 정책 추진
- 주민주도 도시재생 및 동서 간선교통망 구축
-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육성
마을공동체 기반 지역역량 강화, 충남형 인구늘리기 사업

< (산업) 공생과 활력의 충남경제 생태계 >

- 내포신도시를 환황해중심도시로 육성
- 혁신성장 거점 육성 및 자립적 산업생태계 구축
논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 충남지역 산림/해양자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산촌활성화, 친환경 해삼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역내불균형) 충남지역 불균형 해소전략 >

- 제3기 균형발전사업(2018-2010) 심화·확대 추진
- 6대 권역별 차별화된 산업혁신클러스터 전략 추진
- 충남형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운영
충남도·시군간 균형발전 정책목표 협약 체결, 시군에 포괄보조 방식으로 재정지원(3년)

◆ 핵심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18	2022	증감
1인당 GRDP	백만 원	49.8	55.1	5.3
일자리 수	천 명	880	980	100
상대적 빈곤율	%	35.5	23.0	-1.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	4.1	3.8	-0.3
고용률	%	61.9	64.3	2.4
1인당 농림어업 GRDP	백만 원	13.4	14.0	0.6

3.13 전북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천년 전북”

◆ 핵심목표

-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 및 新 문명을 여는 새만금과 함께 대도약하는 전북
- 천년을 이어 온 자긍심으로 새로운 천년을 향해 힘차게 응비하는 전북

◆ 분야별 과제

< (사람)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전북도민 >

- 대학혁신 및 지속가능한 교육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 여행체험산업 육성과 알찬 주민문화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 전라천년 광역관광개발, 문화CT 융합산업 육성
- 포용적·맞춤형 복지 체계
보건복지 통합경로당 운영,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 (공간) 매력있고 생동하는 전북 >

- 보람찾고 사람찾는 활력 농산어촌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농촌 과소화 대응
-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지역 맞춤형 뉴딜사업 활성화, 도시공동체 확대
- 전북형 공동체 기반 지역 활력
농산어촌 마을 청년리더 육성, 마당캠프 및 삼락캠프 운영

< (산업) 신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혁신 >

- 혁신도시 특화 및 지역산업 혁신
금융도시 육성, 탄소산업 육성, 전기상용차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 세계로 향하는 새만금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조기 건설,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준비
- 전북 유희자원의 부가가치 창출
국립무궁화 진흥파크 조성, 개야도 국가어항 건설

< (역내불균형) 차별없는 지역 차별화된 지역 >

- 다르지만 고르게 발전하는 전북
지덕섬 휴양벨트 구축, 노령산맥권 휴양벨트 구축,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전북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확대

◆ 핵심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18	2022	증감
1인당 GRDP	백만 원	24.1	30.1	6.0
일자리 수	천 명	858	992	134
전북 방문객 수	천 명	31,000	80,000	49,000
농산촌 마을청년리더 육성	명	0	200	200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 기업	개소	51	100	49
첨단기술기업 지정	개소	7	30	23

3.14 전남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 핵심목표

-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한반도 태평양 진출입의 섬해양관광 모델지역 구축
- 권역별 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산업 발전기반 구축

◆ 분야별 과제

< (사람) 젊은이가 돌아오는 전남 >

-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활력있는 일자리 경제 구축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 제고를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산업 중심 선도대학 육성, 새천년 인재양성
- 남해안권 신성장 관광휴양벨트 구축
섬진강 동서화합 문화예술벨트 조성, 목포~부산 간 해양관광 거점 조성,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구축

< (공간) 에코 전남, 살고 싶은 농산어촌 >

- 인구감소에 대응한 도시재생 추진 및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
거점도시 고차서비스 시설 공급, 강소도시권 육성, 어촌 뉴딜 300, 스마트 농축어업 혁신모델 개발
- 감동 주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통한 따뜻한 공동체 전남 실현
노인·여성 사회참여 확대, 차별없는 공공서비스 접근성 확보, 다문화사회 대응 공간정책 확대, 도서지역 청주기본권 확보(도서민 생필품 물류비 등), 전남형 기본소득제

< (산업) 전남 미래성장 첨단 신산업 육성 >

- 혁신도시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
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사이언스 파크 조성, 이전기관 맞춤형 스마트 에너지 혁신도시 선도모델 조성, 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산업 육성

< (역내불균형) 지역내불균형 해소전략 >

- 국가 및 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대응 과제 발굴
민선7기 전남 일자리 정책 청사진 제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주민소득 연계사업 추진, 미래 성장거점 마련을 위한 혁신도시 재도약 기반 조성
- 지속적인 SOC 기반 확충을 통한 역내 균형발전 기틀 마련
연륙·연도교 확충, 남해안철도 복선전철화,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 핵심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18	2022	증감
1인당 GRDP	백만 원	39.4	42.6	3.2
일자리 수	천 명	741.6	845.9	104.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천 명	0.85	1.0	0.15
도시재생뉴딜사업	개소	5	25	20
혁신도시 연계 에너지 관련기업 유치	개소	310	1,000	690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개소	32	168	200

3.15 경북 “새바람, 행복 경북”

◆ 핵심목표

- 미래 일자리 기반 마련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저출산 극복 및 행복 육아 환경 조성

◆ 분야별 과제

< (사람) 사람이 찾아오고 도민이 행복한 매력 경북 >

- 교육혁신 선도, 연구역량 강화, 교육기회 균등, 지역 상생발전 강화
- 생활기반 및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관광 혁신주체 개발
-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공간) 농산어촌이 되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숨쉬는 활력 경북 >

- 삼터(일터+쉼터+삶터)가 공존하는 소득주도형의 열린농촌 육성
농촌다움 복원사업
- 경북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력 도모 및 주거취약지 지원
도시재생사업,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 주거 및 일자리 공급을 통한 정주여건 강화
마을기업 육성사업

< (산업)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부자 경북 >

- 경북혁신도시의 발전 촉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육성
- 경북의 특성화된 산업육성을 위한 지역 주도 성장거점 조성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클러스터 구축,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 환동해권 마리아나 중간 기착지 조성을 위한 연안정비 시행
강구항 개발사업

< (사람)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전북도민 >

- 경상북도 4대 권역별 특색을 반영한 성장 거점 틀 구축
북부권: 경북도청의 북부권 이전을 통한 새로운 신성장축 마련
동해안권: 환동해 중심지 입지를 살린 글로벌 연결 및 북방 물류거점 확보
서부권: 첨단산업 중심 신발전 거점 육성
남부권: 항공, 군수산업, 특화농업 및 재활·의료 등의 신산업 중심지 조성

◆ 핵심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18	2022	증감
1인당 GRDP	백만 원	36.8	43.0	6.2
일자리 수	천 명	1,087	1,250	163
국내 관광객 수	천 명	9380	12,000	262
스마트팜 면적	ha	110	250	140
벤처기업 수	개	1,698	2,000	302
연구개발투자액	백만 원	2,400,000	3,000,000	600,000

3.16 경남 “제조업과 공간의 혁신, 청년이 모이는 경남”

◆ 핵심목표

- 일자리와 복지가 어우러진 포용사회 전환
- 4차 산업혁명과 국가혁신성장의 거점화 달성

◆ 분야별 과제

〈(사람) 품격있고 건강한 경남도민〉	
○ 지역대학-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구조 지방대학 역량강화, 지역인재 지원, 도립대학 강화, 경남형 기업트랙·하이트랙 등 취업 지원	
○ 문화격차 해소와 관광거점 및 특화관광 육성 문화기반 확충, 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체류형 관광지 육성	
○ 골고루 보살피는 보건복지체계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검토,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공간) 활력 넘치는 경남〉	
○ 신활력으로 가득찬 농산어촌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생태하천 복원, 생태관광지역 지정	
○ 도시재생으로 특색있는 강소도시권 육성	
○ 인구유출 감소를 위한 지원 및 상생·협력 강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운영, 특수상황지역 개발지원, 생활권연계협력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스마트 혁신〉	
○ 항공우주산업 중심,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의 거점: 경남혁신도시 스마트문화 존 조성, 산학융합지구 조성, 혁신도시 상생발전 사업 추진	
○ 지역산업의 스마트 혁신 및 과학기술기반 구축 주력·경제협력권사업, 경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 유흥자산 활용 국유지 복합개발 및 산림자원·해양자원 활용 노후청사 복합개발, 임산물클러스터 조성,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역내불균형) 동·서부권 균형발전〉	
○ 낙후지역 여가 문화수요 충족 산삼휴양벨리 복합지원센터, 남해 힐링빌리지	
○ 낙후지역 2·3차 산업과 연계발전 도모 해양바이오·항노화상품생산거점단지, 지리산 곳감 현대화	
○ 낙후지역 정주인프라 개선 및 환경보전 3H타운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농어촌생활용수개발	

◆ 핵심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18	2022	증감
1인당 GRDP	백만 원	33.9	37.3	3.6
일자리 수	천 명	1,467	1,661	194
청년실업률	%	10.1	6.3	3.8
인구감소지역 감소율 저감	%	-0.62	-0.34	0.28
과학기술 혁신역량지수	순위	12위	6위	6
고용률	%	62.1	66.1	4.0

3.17 제주 “제주도민이 행복한 공존과 청정의 균형도시”

◆ 핵심목표

- 제주도민 주도 및 참여를 통한 균형발전
-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에 의한 균형발전

◆ 분야별 과제

< (사람) 제주도민 주도의 참여체계 구축 >

- 교육·일자리 맞춤형 창조 인재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산·학·관 맞춤형 특성화고 지원,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1만개(명) 창출
- 제주문화 진흥과 격차 해소, 제주자산을 활용한 관광 특화
거점형 문화체육인프라 확충, 남북 평화크루즈 운영, 제주형 글로벌 생태관광 허브 조성, 웰니스 관광 상품 개발, 제주 휴양공간 조성
- 맞춤형 보건복지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 (공간) 제주전역의 공간적 균형체계 구축 >

- 활력이 넘치는 농산어촌 조성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 남해안벨트 해산물류 연계협력사업, 뷰티화장품 협력사업
- 지속가능한 생활권 기반 도시재생 추진
-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내 인구유출 최소화
우리동네 의료협동조합 사업, 마을 유희공간 공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사업

< (산업) 제주만의 혁신산업 플랫폼 구축 >

- 지속가능한 국제교류·교육연수 거점, 스마트 제주혁신도시 실현
스마트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연수타운 조성, 이전공공기관 지역상생 사업, 제주 스마트기상 육성센터 설립,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지역산업 혁신 완성
전기자동차특구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제주형 스마트팜 사업,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해상풍력 클러스터 연계사업 등
- 제주 유희자산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제주해양경제도시 조성(해양특구, 해양관광, 청정해양보존 등), 제주 국가정원·국립공원 조성, 해조류 리사이클링센터 건립 등

< (역내불균형) 제주도 지역내 불균형 해소 >

- 제주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 도모
소외지역 방문학습 제공 사업, 도민 주도 지역균형발전사업(제주 문화중개소 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제주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계정 세입예산 확충

◆ 핵심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18	2022	증감
1인당 GRDP	백만 원	27	37	10
일자리 수	천 명	258	313	55
농촌지역(읍·면) 인구 증감률	%	3.6	4.1	0.5
공공임대주택 공급수	개소	1,116	4,000	2,884
사업체 증감률	%	3.9	4.4	0.5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가족동반 이주율	%	46.3	60.0	13.7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공동 수립, 지역별로 향후 5년간 지방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핵심과제 도출 및 지방정부 투자계획을 제시

- 각 지역별로 추진과제를 제도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수립함으로써 목표의 구체성 강화
-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추진 과제의 실효성 확보

<표 2-10>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지방정부별 주요 추진계획

지역	핵심 추진과제		투자계획('18~'22, 억원)		
	제도	사업	지방비	기타	총계
서울	- 서울시 과학기술 미래전략 위원회(가칭) 신설을 통한 거버넌스 재편 - 서울시 미래혁신기술진흥조례(가칭) 제정 추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과학 기술정책담당기구로 서울디지털재단 확대·개편	4차 산업혁명 지원 펀드 조성 - 서울창업허브 운영 -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R&D 사업 추진(미세먼지, 태양광 등) - 서울혁신챌린지 추진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 시스템(서울시기술교육원) 단계적 개편 사업	9,024 (0.9%)	-	9,024
부산	- 국비 및 시 자체 R&D투자 확대('22년 1,980억 원, 총 예산 대비 1.5%) - 전략산업별 중장기 R&D 투자전략(2018~2022) 수립 - 민간 연구개발전문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혁신연구지원 제도'추진 - 부산 서비스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수요와 공급 및 IT/非IT가 조화된 4차 산업혁명 선도지구 조성 - 부산형 히든 챔피언 및 강소기업 육성 지원 '부산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 부문 혁신	8,000 (1.3%)	48,900	56,900
대구	- 지역 R&D 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정 개정 - DTIS-NTIS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지역 R&D 거점기관 경영 안정성 제고 및 성과중심 경영 유도 - 대구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통한 연구소 기업의 설립 확대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활성화(인체유래 바이오신소재 개발 사업, 의료기기 표준플랫폼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 지원사업 등) -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미래형 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지원사업 - 지역 융복합 스포츠 산업 거점 육성사업	5,641 (1.45%)	5,145	10,786

인천	• 인천전략산업을 대상, SW 융합생태계 조성·지원 확대 • 인천지역과학기술진흥협의회 기능 강화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IBITP)내 운영 사무국 설치 • 인천 8대 전략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R&D 투자 확대	• ‘기업 기술니즈설명회’ 개최를 통해 인천시 소재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접수 및 DB화 추진 • 인천형 뿌리산업 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한 주요 기술 개발 사업 추진	6,427 (1.5%)	465	6,892
광주	• 광주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 광주시 R&D사업의 사후평가 및 심의조정 기능 부여 • 과학기술진흥조례 개정 계획 수립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조례 개정(광주과학기술진흥위원회 내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 빛고를 차세대 성장분야 연구 개발 지원펀드 조성 • 광주 주력분야에 ICT응용 공동 R&D 협력사업 • 지능정보기술 창업혁신지구 조성, ICT창업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 •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운용 프로그램 마련	4,183 (1.10%)	31,429	35,612
대전	• 대전 과학기술위원회 자문·심의 기능 확대 • 도심주변 개발을 통한 부족한 첨단사업용지 공급	• 실리콘 밸리식 Plug & Play, 중기벤처부 TIPS 운영 방식 적용 사업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 R&D 보급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건립	6,934 (3.4%)	3,717	10,651
울산	• ‘4차산업혁명 U포럼’을 통한 지역 주도 수요맞춤형 R&D 발굴 • 연구개발특구 조성을 통한 획기적인 R&D생태계 확장 • 울산형 R&D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 주력산업의 인프라와 기술기반 미래산업의 글로벌 거점 재도약 • 전지·수소·신재생 에너지산업 글로벌 선도도시 조성 • ICT융합을 통한 차세대 제조 기술개발, 3D프린팅 R&D 클러스터 조성	866 (1.12%)	7,780	8,646
세종	• 세종지역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 예산 조정 및 배분 권한 부여 • 세종시 니즈를 반영한 중장기적 R&D투자 로드맵 수립 • 지방정부 및 전담기관 내 팀 단위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 행정조직 신설	• SB플라자내 ‘비즈커넥트센터’ 설치로 기초연구성과 종합지원, 유망기술 발굴·검증,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등 종합지원 • 지역 내 과학기술 및 거점인프라를 통합하여 ‘부처 통합형 테크노파크’로 지역과학기술 및 산업지원기능 일원화 •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특화 창업클러스터 조성 및 창업보육 서비스 제공	1,497 (2%)	4,139	5,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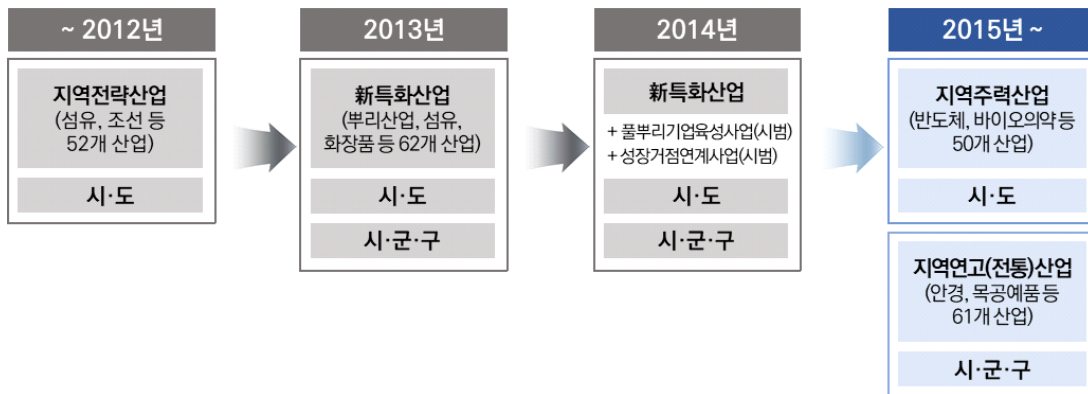
경기	• ‘경기도 R&D 사업기획위원회 (가칭)’ 구성 • 과학기술예산의 종합조정을 위해 경기도 ‘과학기술과’의 ‘과학기술국’ 격상 • ‘경기도 혁신기관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체 기획기능 강화	• 경기도 클러스터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입주기관협의회 활성화 및 커뮤니티 공간조성 • 경기도 R&D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 경기도민 참여 사회문제해결형 과학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과학기술 이슈 토론회 개최	12,869 (2%)	80	12,949
강원	• 강원도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발전계획 수립 및 4차 산업 혁명 대비, 지역 주력 산업 추진 강화	• 디지털 헬스 케어 산업 육성 • 강원도형 수소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 E-Mobility 클러스터 조성 •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770 (2%)	230	1,000
충북	• 충북과학기술위원회 자문·심의 기능 확대 • 충북과학기술포럼 기능중심체제 개편으로 R&D사업 과제 발굴 강화	• 충북연구개발특구 조성 추진, 과학벨트 기초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과학사업화 종합지원 및 기술 솔루션 후속 R&D 추진 • 태양광기술지원센터 등 R&D 기관 운영 및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기반조성 •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 의료기기센터 GLP시험시설 구축 등 바이오·의약 신산업 육성	3,086 (2%)	2,747	5,833
충남	• 충남 R&D 사업 관리, 평가 규정 신설 • 4차산업 대비 인력수급 로드맵 및 연구인력 양성지원 제도 마련 • 충남 지역거점 기술이전 촉진 협의체 운영, 마일리지 제도 활용	• 지역주도 R&D사업(이차전지 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 충남 제조지원 R&D 특구 조성사업 • 주력산업 기술창업전담센터 구축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	3,248 (1.3%)	1,950	5,198
전북	•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신규 R&D 사업 사전 심의·의결 권한 확보 • 전북도 과학기술 전담조직(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확대 • 전북 중소기업 지원(창업, R&D, 기업지원) 사업 종합 관리체계 구축 • 전북 연구개발장비 구축 중장기 로드맵 수립	• 특장차산업 생태계 모델 및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 • 농생명 산업의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새만금 지능형 농생명 실증단지 구축 • 전북특구 탄소·농생명분야 기술창업허브 육성 및 기반 확충 • 첨단 과학기술 문화 융성을 위한 전북과학관 건립 추진	6,235 (2%)	2,922	9,157

전남	• 전남과학기술진흥협의회 분야별 소위원회 설치·운영 • 전라남도 우수과학기술 예우·지원·포상제도 마련	•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 밸리 활성화 • 전남특화인력 양성 활성화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선취업후진학 과정) • 전남연합 기술창업지주회사 설립 추진 • 수산기자재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6,688 (1.61%)	3,762	10,450
경북	• 지방R&D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과학기술전담 기관 설립(경북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의 ‘과학기술과 R&D 정책과정’ 프로그램 신설 • 4차 산업혁명 경북 플랫폼 구축(관련 조례 제정, 전력위원회 구성)	• 경북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 방사광 가속기 신약개발 기술플랫폼 구축 •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및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 경북 전략산업과 연계한 SW 융합 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6,649 (1.5%)	8,135	14,784
경남	• 경남R&D 컨트롤타워 기능 확립 및 지역주도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R&D 거점기관 연계 개방형 산·학·연 R&D 네트워크 구축 • R&D 신사업 기획·발굴 지원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 미래과학기술혁신 경남 10대 신전략산업 지원·육성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육성 및 융복합으로 기존산업 고도화 지원 •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 및 R&D 지원 • 경남 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 사업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	475 (2.16%)	23,770	24,245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조례 개정(과학기술진흥협의회 실효성 확보) • 제주산학융합지구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 글로벌 에코 플랫폼 구축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기술개발) • ICT 기반 신서비스 창출(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서비스개발) • 제주형 6차산업 활성화(지역 특화자원 활용 및 원료화) • 제주 전략산업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인력 선순환 체계 구축	645 (0.3%)	55	700

자료: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2018),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안)”

4. 지역전략산업육성 정책진단

- (지속성 부족) 지역산업정책의 성공에는 지속성이 관건인 반면,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하여 불연속성 문제 발생
- 정책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 지역산업정책의 공간적 범위가 재설정되면서 지역별 타깃산업이 일부 변경되어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현상 발생
 - － 박근혜 정부는 2011년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기존 3단계(광역경제권-시도-시군구)에서 2단계(광역경제권-시도)로 통합하면서, 이에 따라 新특화산업을 새롭게 선정('13.2)
 - － 이를 실행하기 위해 기존에 광역경제권 범위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전략산업과 시군구 단위의 특화산업 분야를 통합·재편하여 각 시도별 5개 이내의 新특화산업을 선정하도록 함
- * 2015년 다시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공간적 범위가 기존의 3단계로 재편됨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7); 연구진 재구성

[그림 2-9] 지역산업정책의 공간적 범위 변화

- (성과관리 미흡) 다양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관리가 미흡
- 사업 성과관리 측면의 기본 설계가 체계적으로 재편될 필요성 대두
 - － 정책 및 사업의 최종목표(goal)는 있으나, 구체적인 중간목표(objectives)가 없고 목표가 광범위하여 평가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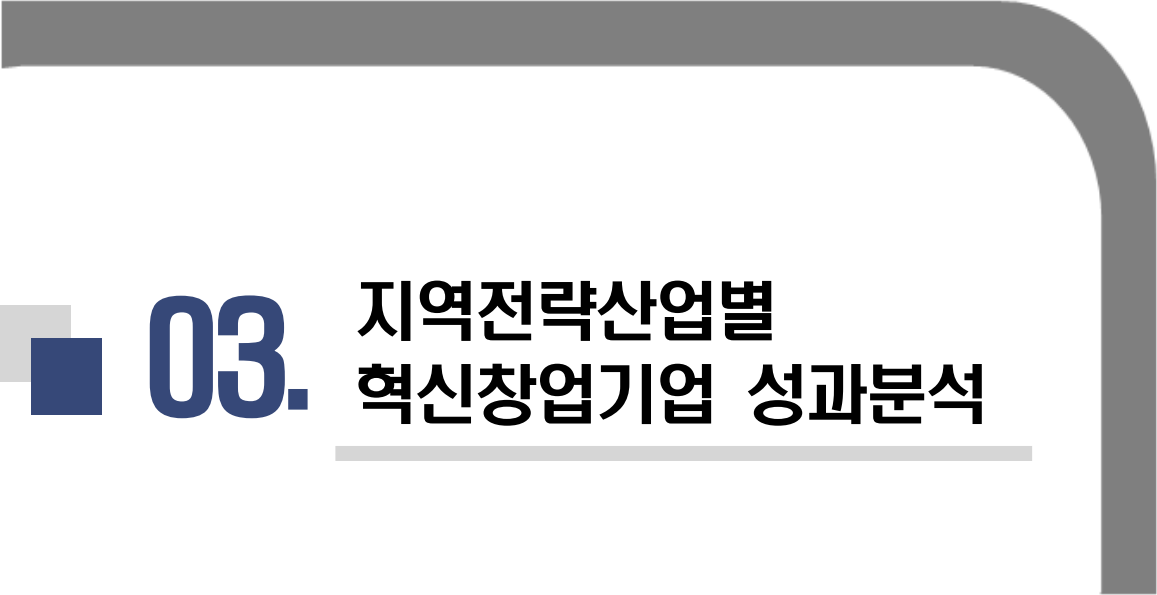
-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 실제 과제 단위에서 성과가 측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범위와 지원대상 등 목표하는 바가 구체화·세분화되지 않음
 - 이에 따라 과제 단위에서 성과목표·지표가 중복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과대추정될 우려가 존재
- 지역전략산업육성에 대한 예산배분 및 그에 따른 성과 모니터링이 부재
- 지역 및 사업단위의 예산 및 성과는 파악되고 있으나, 지역전략산업육성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집행과정 및 성과 추적이 부족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국가균형발전포털(REDIS)를 통해 지역산업정책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의 거시 지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음
 - *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고용률 등은 타 정책효과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의 성과 파악에는 한계
 - * 사업지원 수혜기업 대상 성과추적(기업 재무현황 분석)은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성과 부문이 많음
 - 타 정책의 성과측정 변수와 차별성 없이 측정하고 있고, 별도의 성과 추적이 수행되지 않아 실제 지역전략산업육성 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가 구별되지 못함
 -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 추진에 따른 직접적인 투입(input)-산출(output) 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별도의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

<표 2-11> 국가균형발전포털의 지역발전 부문별 지표

부문	세부지표
경제·산업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총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비율, 전산업 종사자 대비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 비율, 전산업 종사자 대비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 수출 실적, 1인당 평균 소비 지출액, 재정자주도, 산업입지계수, 산업다양성지수, 산업상대적특화도
인력·교육	연평균인구증가율, 조출생률, 경제활동인구비율, 실업률, 고용률, 대학교 이상 인구비율, 노령화율, 초중고 학령인구 대비 학교수, 인구십만명당 평생교육기관(학원포함)수, 교원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공공교육비
정주·인프라	지역 간 연계 도로연장, 지역 내 연계 도로연장, 주거면적 기준 저급주택 비율, 시가화면적 비율, 자가 주택비율, 상수도 보급률, 하수처리비율,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사회·복지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다문화 가구 비율, 임대주택 재고비율, 영유아 인구 대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수비율, 일반회계 대비 복지예산 비중, 노인 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 1인 가구 비율, 만명당 병상 수, 만명당 의사 수
문화·환경	인구 십만명당 문화시설수, 1인당 자연공원 지정면적, 한달 평균 문화여가 지출비, 지역 관광객 수, 폐기물 재 활용율,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실적,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연평균 대기 오염도, 만명당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

자료: 국가균형발전포털, <http://www.redis.go.kr>



03. 지역전략산업별 혁신창업기업 성과분석

III. 지역전략산업별 혁신창업기업 성과분석

1. 분석개요

- (목적) 현행의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객관적 근거 및 기초자료 마련
 - 지역별 혁신창업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응답된 조사내용을 토대로 현행 창업지원 정책 진단
 - 계량경제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로 지원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도출
- (분석자료) 14개 시도의 지역전략산업별 혁신창업기업의 일반현황, 기술현황, 정부지원사업 참여현황, 투자유치현황, 경영현황, 창업자 특성 등을 조사한 설문자료를 분석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및 (사)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의 협조로 산학연 협력기술지주회사(자회사),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KST), 연구원창업기업, 교원창업기업, 연구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조사결과 총 311개 창업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일부 결측치가 있는 표본을 제외하여 최종 250개 기업을 분석표본으로 확정
- (분석내용 및 방법론) 지역전략산업별 혁신창업기업 실태를 파악하고, 계량경제모형 분석을 통한 성과 결정요인 규명
 - 혁신창업기업 현황 파악을 위하여 조사문항별 기초통계 및 응답빈도 분석
 - 지역전략산업별, 기술주체별, 정부지원여부에 따른 성과 차이 비교
 - * 성과차이 비교에는 t-test 및 ANOVA(분산분석), 다중회귀모형(OLS)을 사용
 - 혁신창업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성과 결정요인 확인
 - * 정부지원의 연구개발투자 촉진효과와 기업/창업자특성-성과간 인과관계 분석
 - * 분석방법으로는 성과변수의 형태(이진형/가산형/연속형)에 따라 다중회귀모형(OLS), 음이항회귀모형(NB), 로짓(Logit)모형 등 적절한 모형을 사용
 - 분석에는 통계패키지인 Stata/IC 16.0을 활용

2. 혁신창업기업 실태현황

□ 일반적 현황

- (기업유형) 표본기업의 유형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자회사 순으로 많았으며, 교원창업이 가장 적은 수로 조사됨
- (업력) 표본기업은 주로 1년에서 5년 사이의 창업기업으로 조사되었으며,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대비 11.2%로 나타남

<표 3-1> 표본기업의 유형 및 업력 현황

기업유형			업력		
구분	n	%	구분	n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122	48.80	1년 미만	39	15.60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자회사	70	28.80	1년 이상 ~ 2년 미만	62	24.80
			2년 이상 ~ 3년 미만	57	22.80
연구원창업기업	38	15.20	3년 이상 ~ 5년 미만	64	26.60
교원창업기업	8	3.20	5년 이상 ~ 8년 미만	19	7.60
연구소기업	12	4.80	8년 이상	9	3.60
계	250	100	계	250	100

- (산업) 혁신창업기업의 산업분야는 지역전략산업중 바이오, 헬스케어, 스마트디바이스 순으로 많았으며, 수송기기부품은 조사되지 않았음

* 다수의 산업에 걸쳐 활동 또는 융·복합분야인 경우를 고려하여 설문을 각 지역 전략산업별 해당여부(해당 또는 비해당)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표 3-2> 지역전략산업별 창업현황

구분	n	%	구분	n	%
자동차부품	12	4.80	스마트시티	15	6.00
전기·자율차	6	2.40	스마트 시스템	28	11.20
조선해양	18	7.20	스마트가전전자	4	1.60
수송기기부품	0	0	광융합	7	2.80
지능형기계	12	4.80	지능형 반도체	5	2.00
기계·지능부품	23	9.20	스마트디바이스	32	12.80
에너지산업	25	10.00	지능정보서비스	27	10.80
헬스케어	41	16.40	탄소소재	5	2.00
농생명	13	5.20	첨단소재	25	10.00
화장품·식품	29	11.60	특화소재	13	5.20
바이오	52	20.80	스마트 관광	2	0.80

주: 전체 기업 대비 해당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비중을 의미함; obs=250

□ 창업자 특성

- (창업자 성별 및 연령대) 창업자의 성별은 남성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연령대는 주로 30~40대로 나타남

<표 3-3> 창업자의 성별 및 연령

성별			연령		
구분	n	%	구분	n	%
남성	242	96.80	20대	4	1.60
			30대	24	9.60
			40대	94	37.60
여성	8	3.11	50대	77	30.80
			60대 이상	37	14.80
			무응답	14	5.60
계	250	100	계	250	100

- (창업자 학력) 혁신창업기업의 창업자 중 박사학위를 보유한 기업은 전체 대비 절반 수준의 비중(49.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사 및 기타 학력을 보유한 창업자가 그 다음으로 많았음
 - － 기술에 기반한 창업은 해당 기술 및 관련 전문성이 기업의 핵심자원이라는 점에서 박사급 인력의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 학사 및 기타 학력을 보유한 인력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에 걸쳐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여 공공부문으로부터 기술이전(출자)받아 창업한 경우로 예상됨
- (창업자 전공분야) 창업자의 전공분야는 주로 공학이 많았으며, 예체능이 가장 적은 수로 나타남

<표 3-4> 창업자의 학력 및 전공분야

학력			전공분야		
구분	n	%	구분	n	%
박사	124	49.60	인문학	12	4.80
			사회과학	14	5.60
석사	53	21.20	자연과학	47	18.80
			공학	155	62.00
학사 및 기타	73	29.20	예체능	3	1.20
			기타	19	7.60
계	250	100	계	250	100

- **(창업당시 소속)** 혁신창업기업은 주로 창업자가 겸직상태에서 창업한 경우가 많은 반면, 휴직을 한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됨
 - －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창업을 전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에서 시도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임

<표 3-5> 창업자의 창업 당시 소속

소속(직위)			소속형태		
구분	n	%	구분	n	%
교원	52	20.80	겸직	143	57.20
연구원	56	22.40			
학부생	1	0.40			
석사	11	4.40	무직	86	34.40
박사	19	7.60			
기타	111	44.40	무응답	6	2.40
계	250	100			
			계	250	100

- **(창업준비)** 혁신창업기업은 1년에서 2년 사이의 준비기간을 거쳐 창업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기업도 일부 조사됨
 - － 통계청(2018)에 따르면, 일반 창업준비기간의 경우 3개월 미만이 절반 수준(49.8%)이며 6개월 미만까지 합하면 74.4%으로 조사되고 있어,
 - － 혁신창업은 일반 창업 대비 준비기간이 큰 차이로 길게 나타남
- **(창업 파트너)** 혁신창업기업은 파트너가 있는 상태에서 창업한 경우가 절반 수준의 비중(48%)으로 나타남
 -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혁신창업은 주로 겸직상태에서 시도되는 관계로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동창업·운영이 선호될 수 있음
 - * 특히 대학의 경우, 교원이 창업 시 겸직문제로 제약조건이 많아 직접 대표이사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대학원생과 공동으로 창업하는 사례가 많음
 - － 그러나 여전히 단독형태의 창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52%)은 지적 재산이나 경영권 소유에 대한 분쟁 등의 사례들이 지속 나타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도 추측해볼 수 있음

<표 3-6> 창업자의 창업준비

창업 준비기간			창업파트너 유무		
구분	n	%	구분	n	%
1년 미만	34	13.60	파트너 없음	130	52.00
1년 이상, 2년 미만	111	44.40			
2년 이상, 3년 미만	47	18.80			
3년 이상, 5년 미만	42	16.80	파트너 있음	120	48.00
5년 이상	16	6.40			
계	250	100	계	250	100

- (기타 창업자 역량) 혁신창업기업의 창업자는 대부분 산업체 경력 및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혁신역량은 높은 반면, 창업교육이수 및 과거 창업경험 등 기업가적 측면은 다소 미흡

<표 3-7> 기타 창업자의 특성

	산업체 경력		관련 특허		과거 창업경험		창업교육이수	
구분	n	%	n	%	n	%	n	%
없음	72	28.80	71	28.40	150	60.00	123	49.20
있음	178	71.20	179	71.60	100	40.00	127	50.80
계	250	100	250	100	250	100	250	100

- (산업체경력-관련특허) 혁신창업기업 창업자 중 절반(50.8%)은 산업체 경력이 있으면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산업체경력-과거창업경험) 산업체경력과 과거 창업경험을 모두 보유한 창업자는 전체 기업 중 35.2%로 확인되었으며, 반대로 모두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24%)으로 확인됨
 - * 이는 산업체 경력을 보유한 경우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창업자 자신의 실무역량에 기반하여 재창업 의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 가능
- (산업체경력-창업교육이수) 산업체 경력 보유한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자가 많았으며, 산업체 경력 미보유 집단의 경우 창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창업자가 많았음
- (관련특허-과거창업경험) 혁신창업기업의 창업자 중 관련특허를 보유하였지만 과거 창업경험은 없다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으며(42.4%), 반대로 과거 창업경험은 있지만 관련특허는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적었음(10.8%)
- (관련특허-창업교육이수) 관련특허를 보유한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자가 많았으며, 반대로 관련특허 미보유 집단의 경우 창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창업자가 많았음

- * 관련특허를 보유하면 이에 기반한 창업 의지는 유발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 * 앞서 관련특허 보유 집단에서 과거 창업경험이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쉽고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규제 혁신이 필요함을 시사

－ (과거창업경험-창업교육이수) 과거 창업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창업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많았으며, 창업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창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 오히려 창업경험이 없는 경우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과정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나, 정반대의 실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
- * 수요관점에서 실제 창업과정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교육기관 및 관련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노력과 이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표 3-8> 기타 창업자 특성 현황에 대한 4분표(크로스표)

		산업체 경력		관련특허		과거창업경험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관련특허	없음	20(8)	51(20.4)	－	－	－	－
	있음	52(20.8)	127(50.8)	－	－	－	－
과거창업경험	없음	60(24)	90(36)	44(17.6)	106(42.4)	－	－
	있음	12(4.8)	88(35.2)	27(10.8)	73(29.2)	－	－
창업교육이수	없음	42(16.8)	81(32.4)	43(17.2)	80(32)	79(31.6)	44(17.6)
	있음	30(12)	97(38.8)	28(11.2)	99(39.6)	71(28.4)	56(22.4)

단위: 기업 수, %

○ (창업동기) 혁신창업기업은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의 보유’가 동기로서 창업된 경우가 많았으며, ‘자아실현, 자율성 등의 개인적 요인’이 그 다음으로 많았음

－ 반면, 취업의 어려움에 따른 도피성 창업이나 스펙 또는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한 경우는 조사되지 않았음

<표 3-9> 혁신창업기업의 창업동기

구분	obs	n	응답률(%)
자아실현, 자율성 등의 개인적 요인	250	64	25.60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 보유	250	158	63.20
사회의 문제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250	34	13.60
취업의 어려움/취업 스펙에 도움이 되어서	250	0	0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250	28	11.20
주변(멘토 등)의 권유	250	6	2.40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해	250	0	0
자유롭게 일하려고	250	4	1.60

○ (창업 장애요인) 창업시 자금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창업시 장애요인으로 경제활동(생계유지)의 문제가 두번째로 많이 응답된 결과를 볼 때, 혁신창업에 있어서 재정적 측면이 일종의 ‘허들(hurdle)’임

<표 3-10> 창업시 장애요인

구분	obs	n	응답률(%)
창업자금 확보에 예상되는 어려움	250	162	64.80
창업실패 및 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250	30	12.00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능력, 경험의 부족	250	32	12.80
창업준비부터 성공까지의 경제활동(생계유지) 문제	250	35	14.00
창업자(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분위기	250	3	1.20
지인(부모, 친척, 친구, 선후배 등)의 만류	250	0	0
기존 직업활동(휴, 겸직, 휴학, 학업병행 등)의 제한	250	11	4.40

□ 혁신창업기업의 기술현황

○ (기술주체) 혁신창업기업의 기술주체는 대학이 가장 많았으며(55.6%), 전체 표본기업 중 16.4%는 복수(2건 이상)의 기술을 이전(출자)하였음

<표 3-11> 창업기술의 주체

기술주체			복수(2건 이상)기술 활용 여부		
구분	n	%	구분	n	%
대학	139	55.60	2건 이상	41	16.40
출연(연)	97	38.80			
공동	14	5.60	1건	209	83.60
계	250	100	계	250	100

- (기술이전/출자 동기 및 제품활용여부) 기술이전(출자)의 주요 동기는 공공기술의 우수성으로 조사되었으며, 절반 이상(57.2%)의 경우 현재 까지도 활용되고 있음

<표 3-12> 혁신창업기업의 기술이전/출자 이유 및 기술활용여부

기술이전/출자 이유			이전/출자기술 제품활용여부		
구분	n	%	구분	n	%
기술의 우수성	141	56.40	미활용	45	18.00
대학/출연(연)의 지원 기대	37	14.80	회사 초기에 활용	57	22.80
정부지원 사업에 필요	37	14.80	현재까지 활용	143	57.20
기타	26	10.40	무응답	5	2.00
무응답	9	3.60			
계	250	100	계	2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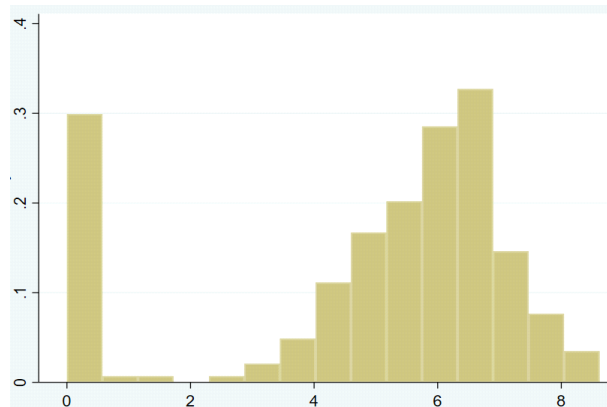
- (후속지원) 혁신창업기업이 기술이전(출자) 이후 대체로 해당 기술의 주체로부터 후속지원을 받았음(81.2%)
 - － 특히 기술주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후속개발에 참여한 경우가 전체 기업 대비 3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전체 기업 중 18.8%는 기술주체의 후속지원이 부재하였음

<표 3-13> 기술이전(출자)이후 후속지원 정도

구분	미지원	일부지원	보통	적극적 지원	후속개발 참여
N	47	57	50	81	15
%	18.80	22.80	20.00	32.40	6.00
n=250					

□ 정부지원 현황

- (지원규모) 혁신창업기업은 평균 1~2건 사이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약 5억 4,598만원을 수혜받은 것으로 조사됨
 - － 전체 기업 중 12%는 정부지원사업에 3건 이상 참여한 반면, 정부지원을 수혜받지 못한 경우는 16%로 나타남
 - － 지원금액의 경우 평균 대비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정부 지원 규모의 양극화 현상이 우려됨
 - * 자연로그를 취한 값에 대한 도수분포 그래프([그림 3-1])를 볼 때, 정부지원 수혜규모가 큰 부분과 0인 부분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 * 정부지원 수혜그룹의 정부지원금액: 평균 6억 5,939만원(표준편차 815.06)



[그림 3-1] 정부지원규모의 도수분포

<표 3-14> 혁신창업기업의 정부지원 수혜(참여)현황

정부지원 건수			정부지원 금액		
구분	n	%	구분	평균	표준편차
0건	40	16.00	정부지원 금액 (단위: 백만원)	545.98	782.16
1건	68	27.20		최소값	최대값
2건	112	44.80		0	5,540
3건 이상	30	12.00			
계	2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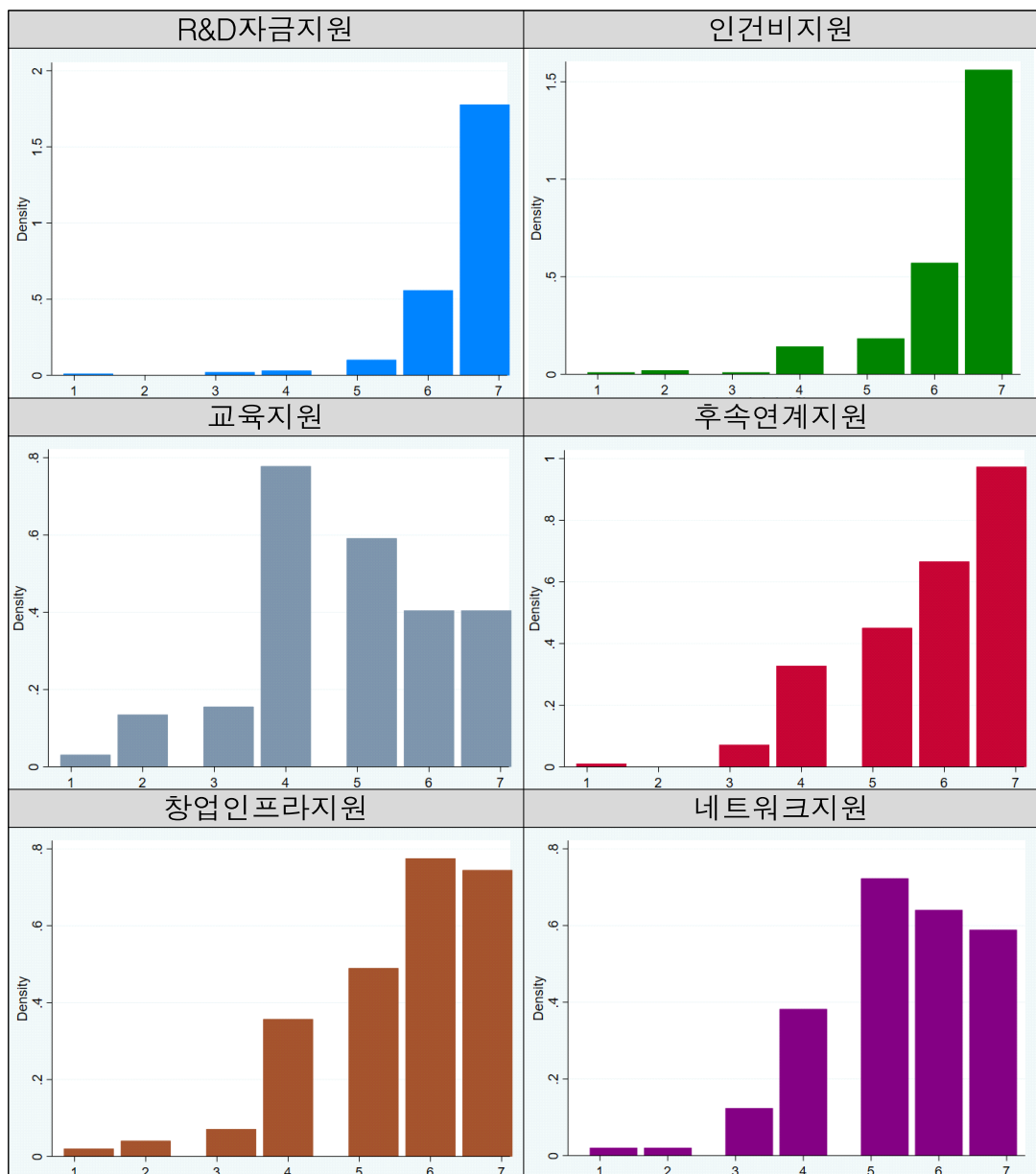
- (지원요소별 중요도) 정부지원의 중요도는 전체 평균 5.78점(7점 만점)으로 응답되었으며, 세부 요소별로는 R&D자금지원, 인건비지원, 후속연계지원 순으로 높았음
 - － 혁신창업기업에 있어 특히 재무적 요소(R&D자금, 인건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교육지원의 중요도가 타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는 혁신창업기업의 창업자 학력수준이 높아 교육 필요성을 낮게 인식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3-15> 정부지원요소별 중요도 응답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무응답수
R&D자금지원	6.60	.78	1	7	4
인건비지원	6.37	1.03	1	7	5
교육지원	4.84	1.43	1	7	9
후속연계지원	5.84	1.20	1	7	6
창업인프라지원	5.62	1.29	1	7	5
네트워크지원	5.42	1.26	1	7	8
전체	5.78	1.17	1	7	-

주: 각 요소별로 제시한 기초통계량은 무응답 표본을 제외하여 계산한 결과임.

주2: 전체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각 기초통계 항목별 평균임.



[그림 3-2] 정부지원요소별 중요도의 도수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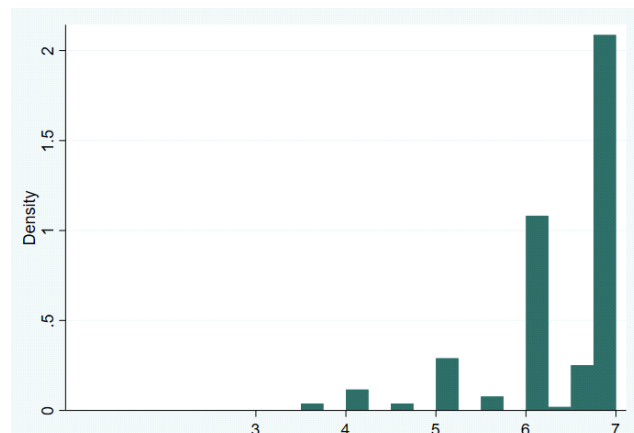
- **(정부지원의 기여도)** 정부지원사업의 기여도는 평균 6.38점(7점 만점)으로 나타나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됨
 - － 특히 R&D자금, 인건비 등 재무적 요소가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움이 된 사업유형)** 혁신창업기업에 있어 가장 도움이 된 지원사업 유형 응답결과는 후속 R&D 지원, 사업모델 개발지원, 기술/사업아이템 발굴지원 순으로 많았음
 - － 특히 사업모델 개발과 기술/사업아이템 발굴 등 비즈니스 측면에 대한 지원 만족도가 높음(47.2%)
 - － 반면에 네트워킹 지원사업으로 응답한 기업은 없었으며, 해외진출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1건밖에 조사되지 않음

<표 3-16> 혁신창업기업의 정부지원에 대한 평가

도움이 된 사업유형			정부지원 기여도			
구분	n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술/사업아이템 발굴	58	23.20	6.38	.82	3.5	7
사업모델 개발	60	24.00	정부지원 필요시점			
후속 R&D	86	34.40				
네트워킹	0	0	구분		n	%
해외진출	1	.40	회사설립 전		5	2.00
무응답	45	18.00	설립단계		22	8.80
계	250	100	설립 후 사업 초창기		187	74.80
			사업 성장기		24	9.60
			무응답		12	4.80
			계		250	100

주1: 도움이 된 사업유형의 무응답은 정부지원을 수혜받지 않은 기업이 포함된 수임

주2: 정부지원 기여도는 정부지원을 수혜받은 기업들에 한해 응답된 결과로 측정함



[그림 3-3] 정부지원기여도의 도수분포

○ (정부지원 필요시점) 혁신창업기업은 대다수(74.8%) 설립 후 초창기에 정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상대적 관점의 평가로, 설립 후 초창기가 타 시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 * 특히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의 경험이 반영된 응답한 것으로,
 - * 예컨대 업력이 긴 기업은 과거 초창기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에 비추어 응답하거나, 초창기에 속하는 기업들은 현재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이 응답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
 - * 실제 기업들이 정부지원을 수혜받은 시점과 기여도를 대조해본다면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업력별로 살펴봐도 설립 후 초창기로 고르게 응답되고 있음
- 혁신창업기업들이 설립 후 초기에 재무적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음

<표 3-17> 업력별 정부지원필요시점 응답결과(크로스표)

		업력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8년 미만	8년 이상
정부 지원 필요 시점	회사설립 전	1(0.4)	3(1.2)	1(0.4)	0(0)	0(0)	0(0)
	설립단계	4(1.6)	3(1.2)	5(2)	7(2.8)	1(0.4)	2(0.8)
	설립 후 사업 초창기	28(11.2)	46(18.4)	47(18.8)	47(18.8)	14(5.6)	5(2)
	사업 성장기	4(1.6)	5(2)	2(0.8)	7(2.8)	4(1.6)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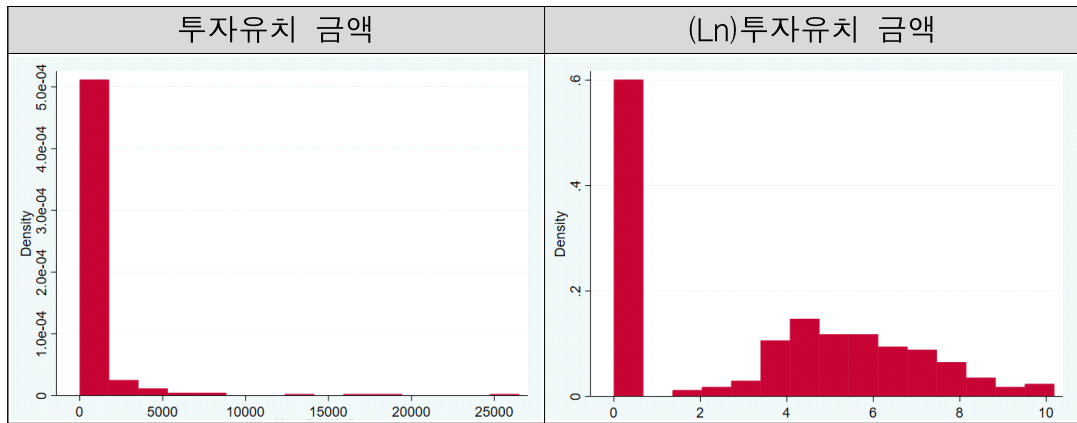
단위: 기업 수, %
주: 무응답은 제외함

□ 투자유치 현황

○ (투자유치 규모) 혁신창업기업 중 약 60%는 1건 이상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전체 투자규모는 평균 7억 6,373만원으로 조사됨

<표 3-18> 투자유치 현황

투자유치 건수			투자유치 금액(단위: 백만원)		
구분	n	%	구분	평균	표준편차
0건	100	40.00	투자유치 금액	763.73	2,648.32
1건	81	32.40		최소값	최대값
2건	56	22.40		0	26,499
3건 이상	13	5.20			
계	250	100			



주: 투자유치금액은 0 미만의 값을 갖지 않는 동시에 변수의 측정단위 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Ln)으로도 구간별 분포를 확인하였음

[그림 3-4] 투자유치 규모의 도수분포

- (최초 투자유치 소요기간) 대부분 1년 이내로 투자를 유치(73.6%)할 수 있었으나, 26.4%의 기업은 최초 투자유치에 1년 이상 소요됨

<표 3-19> 최초 투자유치 소요 기간

구분	1년 이하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계
n	148	47	8	11	250
%	73.60	18.80	3.20	4.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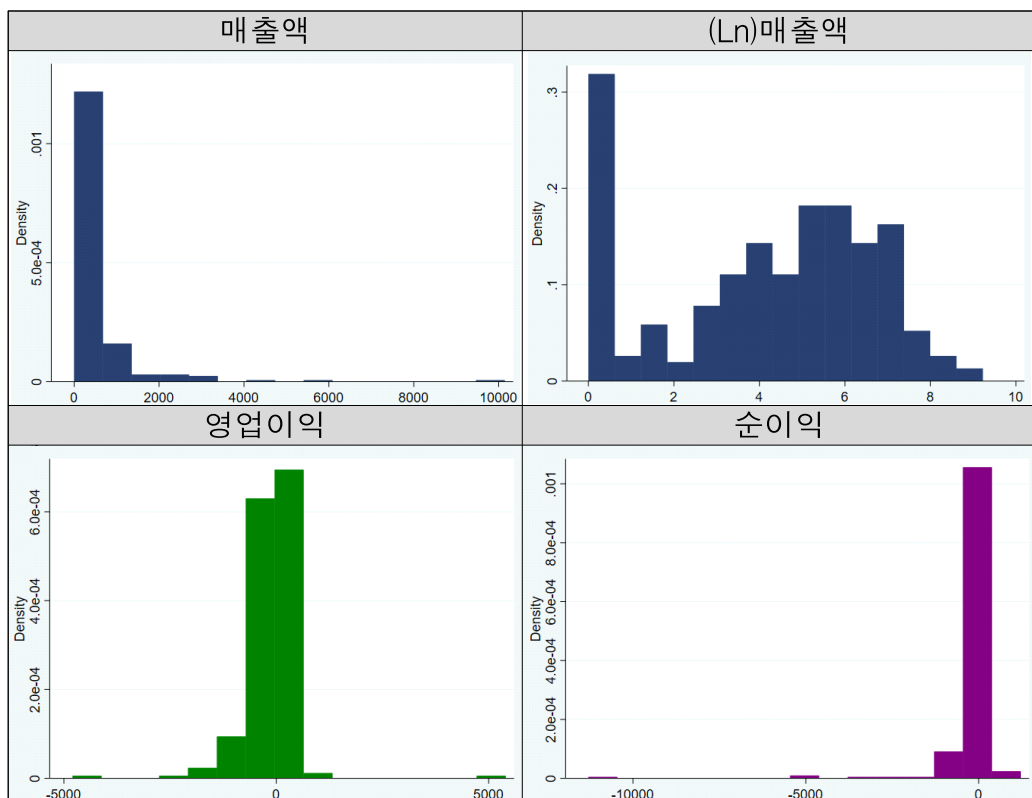
□ 혁신창업기업 경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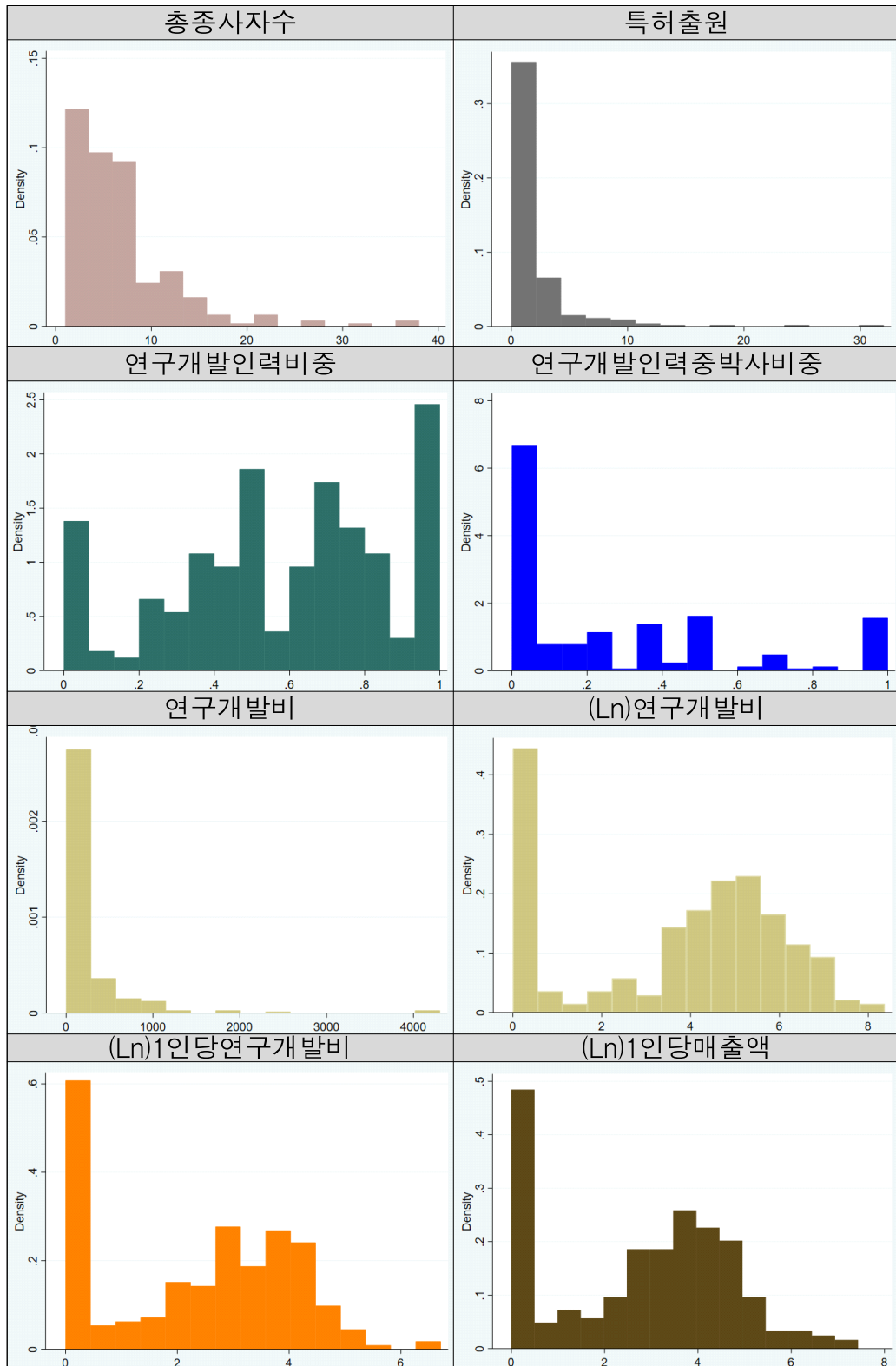
- (재무현황) 혁신창업기업의 매출액 및 1인당 매출액 평균은 2018년 기준 각각 4억 2,894만원, 6,871만원 규모이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의 경우 평균적으로 적자(-)인 실정
 - － (매출액) 매출액이 0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집단(0원)을 제외하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어 혁신창업기업에 있어 경제성 결과가 발생하는 단계, 즉 허들을 넘어서는 것이 강조됨을 시사
 - － (영업이익 및 순이익) 도수분포 그래프([그림 3-2])에서도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대체로 0 또는 그 이하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음
- (연구개발 현황) 혁신창업기업의 연구개발비 평균은 2018년 기준 2억 2,93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평균 3,379만원을 투자하고 있음
 - － 전체 기업 중 58개 기업(23.2%)은 연구개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음
 - － 연구개발비가 0원인 기업군을 제외하면 대체로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볼 때 연구개발 투자의 촉발(促進)에 초점을 둔 지원수단이 혁신창업기업 육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인력현황) 혁신창업기업의 인력규모는 평균 6.65명이며, 이 중 연구개발인력이 평균적으로 약 58%를 차지
 - － 연구개발인력 중 박사급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로 조사됨
- (특허출원 현황) 혁신창업기업의 평균 특허출원 규모는 기준 약 1.99건으로 조사됨
 - － 전체 기업 중 39.2%(98개사)는 특허출원 실적이 0건이었으며,
 - － 특허출원이 없는 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경우가 30.61%(30개사)임

<표 3-20> 혁신창업기업의 경영현황(n=250)

구분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매출액	백만원	428.94	946.97	0	10,143.7
영업이익	백만원	-170.08	603.69	-4,794.12	5,399
순이익	백만원	-189.13	920.37	-11,286.32	1,215.81
연구개발비	백만원	229.39	483.08	0	4,305
특허출원	건	1.99	3.53	0	32
총종사자수	명	6.65	5.69	1	38
연구개발인력비중	%	.58	.30	0	1
연구개발인력중박사비중	%	.26	.33	0	1
1인당 연구개발비	백만원	33.79	70.65	0	824.4
1인당 매출액	백만원	68.71	159.28	0	1,690.617





주: 0 미만의 값을 갖지 않는 변수로서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1인당 연구개발비, 1인당 매출액 등은 변수의 측정단위 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Ln)으로도 구간별 분포를 확인하였음

[그림 3-5] 혁신창업기업의 경영현황 도수분포

3. 혁신창업기업 성과분석 결과

□ 정부지원에 따른 성과 차이

- (성과차이 검증모형) 정부지원 여부에 따른 기업의 성과차이 검증에는 t-test를 활용하였음
 - － 표본기업은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수혜군과 미수혜군, 즉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뉨
 - － 이처럼 두 개의 집단에 대한 차이분석에는 t-test 기법이 가장 대표적
- 검증 결과, 특허출원만이 5% 이내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 이는 정부지원을 수혜받은 기업군이 수혜받지 않은 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출원 성과가 약 1.93건 많은 것을 의미하며,
 - － 다른 성과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여부에 의해 나타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측됨

<표 3-21> 정부지원 여부에 따른 성과 차이

구분	Cont	Std. Err	p
매출액	273.46	164.48	.098
영업이익	-200.24	104.66	.057
순이익	95.35	160.63	.553
연구개발비	-41.06	30.55	.627
특허출원	1.93	.60	.002
1인당 연구개발비	-17.95	12.29	.145
1인당 매출액	5.96	27.82	.830

□ 지역전략산업별 정부지원 현황 및 차이

- (정부지원 규모 차이 분석모형) 지역전략산업별 정부지원 규모(금액)의 차이검증에는 산업더미를 독립변수로서 투입한 다중회귀(OLS) 분석을 활용하였음
 - － 다중회귀 분석에 있어 절편은 0으로 설정
 - * 절편을 0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오차항(error term)으로 인해 독립변수가 모두 0인 경우에도 종속변수가 0이 아닌 값을 가지게 될 수 있음
 - * 즉, 현실적으로 표본 중에는 정부지원을 수혜받지 못한 기업이 있으나, 이들 기업들의 종속변수 추정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존재
 - * 더미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 시 절편을 고정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음

$$GOV = \beta_1 d_1 + \beta_2 d_2 + \dots + \beta_n d_n,$$

여기서 GOV 는 정부지원 규모(금액) 변수이며, d 는 각 지역전략산업 해당 여부를 의미하는 더미변수임

주: 더미변수는 1 또는 0 값을 가지는 형태의 변수를 가리킴

- 검증 결과, 지능형반도체 및 바이오, 지능정보서비스, 조선해양, 헬스케어 등의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차이를 보임
 - 이러한 결과는 해당 산업의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수혜받은 금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임
 - 이들 산업은 평균 지원횟수 또한 타 산업에 비해 많은 편으로 나타남
 - 바이오 및 조선해양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큰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었지만 정부지원 기여도 응답결과는 전체 평균(6.38)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양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
- 특히 지능형반도체 산업은 정부지원 기여도에서도 높은 점수(6.67점)로 응답되어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 우수함
 - 정부지원 기여도가 가장 높게 응답된 지역전략산업은 자동차부품 산업으로 조사됨(6.73점)
 - 반면 농생명, 광융합, 스마트시스템 등 산업의 정부지원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미흡

<표 3-22> 전략산업별 정부지원 현황 및 차이

구분	지원금액	지원횟수(최대: 3건 이상)				정부지원 기여도(7점 만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동차부품	-	1.75	.87	0	3	6.73	.52	5.5	7
전기자동차	-	1.5	.55	1	2	6.5	.84	5	7
조선해양	296.47** (95.10)	1.76	.66	1	3	6.35	.95	3.5	7
지능형기계	-	1.8	.63	1	3	6.55	.69	5	7
기계지능부품	-	1.56	.63	1	3	6.44	.73	5	7
에너지	-	1.73	.77	1	3	6.51	.69	5	7
헬스케어	240.89* (94.50)	1.86	.73	1	3	6.41	.82	4	7
농생명	-	1.92	.67	1	3	6.13	.96	4	7
화장품·식품	-	1.71	.75	0	3	6.25	.91	4	7
바이오	612.47*** (186.47)	1.93	.75	0	3	6.32	.88	3.67	7
스마트시티	-	2.08	.64	1	3	6.38	.74	5	7
스마트시스템	-	2.09	.53	1	3	6.19	.77	4.5	7
스마트가전·전자	-	1.75	.96	1	3	6.5	1	5	7
광융합	-	1.83	.75	1	3	6.17	1.33	4	7
지능형반도체	1,201.65* (581.00)	2.4	.55	2	3	6.67	.47	6	7
스마트디바이스	-	1.96	.66	1	3	6.38	.68	4	7
지능정보서비스	473.17*** (128.44)	1.88	.73	1	3	6.37	.69	4.67	7
탄소소재	-	1.75	.5	1	2	6.5	.58	6	7
첨단소재	-	1.76	.54	1	3	6.52	.77	4	7
특화소재	-	1.5	.53	1	2	6.5	1.11	3.5	7
스마트관광	-	0	0	0	0	0	0	0	0
수송기기부품	-	0	0	0	0	0	0	0	0
obs	250	250				250			

주: * 및 **, ***는 각각 5%, 1%, 0.1% 이내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괄호 안은 robust 표준오차임.

주2: 유의하지 않은 변수의 계수값은 제시하지 않음

□ 기술주체별 성과 차이

- (기술주체별 성과차이 검증모형) 기술주체별 기업성과의 차이 검증에는 ANOVA(분산분석)를 활용하였음
 - － 표본기업은 기술주체에 따라 대학, 출연(연), 대학 및 출연(연) 공동 등 세 개의 집단으로 나뉨
 - － 세 개 이상 집단에 대한 차이분석에는 ANOVA 기법이 가장 대표적
- 검증 결과, 혁신창업기업의 연구개발비만이 기술주체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측됨
 - － 이러한 차이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출연(연)으로부터 기술을 이전(출자)한 기업군의 연구개발비가 대학으로부터 이전(출자)한 기업군에 비해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 대학 및 출연(연)의 공동기술을 이전(출자)한 기업군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표 3-23> 기술주체별 창업기업 성과 차이

구분	F	p	사후검증
매출액	.15	.861	-
영업이익	.12	.885	-
순이익	.07	.937	-
연구개발비	3.81	.024	대학 < 출연(연)
특허출원	.79	.457	-
1인당 연구개발비	2.54	.081	
1인당 매출액	2.01	.136	

주: 기술주체는 대학, 출연(연), 대학 및 출연(연) 공동 등으로 구분함.

주2: 사후검증에는 Bonferroni 기법을 적용함.

□ 지역전략산업별 성과 차이

- (성과 차이 분석모형) 지역전략산업별 성과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모형과 같이 다중회귀(OLS) 및 음이항(negative binomial; NB) 분석을 실시함
 - － 변수의 형태에 따라 매출액 및 영업이익, 순이익, 연구개발비, 1인당 연구개발비, 1인당 매출액에 대해서는 다중회귀(OLS) 분석,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음이항 분석을 적용
 - * 다중회귀(OLS) 및 음이항(NB) 분석은 종속변수의 형태가 각각 연속형(continuous), 가산형(countable)일 때 활용 가능함

$$Performance = \beta_1 d_1 + \beta_2 d_2 + \dots + \beta_n d_n,$$

여기서 *Performance*는 매출액 및 영업이익, 순이익, 연구개발비, 특허출원, 1인당 연구개발비, 1인당 매출액 등 기업성과 변수이며, d 는 각 지역전략산업 해당여부를 의미하는 더미변수임

주: 더미변수는 1 또는 0 값을 가지는 형태의 변수를 가리킴

- **(매출액 차이)** 혁신창업기업의 매출액 차이는 지능형기계, 탄소소재, 스마트시스템,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산업에서 유의하게 관측됨
 - 지능형기계 및 탄소소재, 스마트시스템, 헬스케어 산업의 기업들은 타 지역전략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큰 반면, 스마트시티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음
- **(영업이익 차이)** 영업이익의 경우 헬스케어 및 지능형반도체, 스마트디바이스 등 산업의 기업들이 타 전략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
- **(순이익 차이)** 순이익 차이 분석결과에서는 화장품·식품, 스마트시티, 지능형반도체, 바이오 등 산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화장품·식품 산업의 순이익 규모는 타 전략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반면, 바이오 및 지능형반도체, 스마트시티 등 산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 특히 바이오 산업의 순이익 규모가 큰 차이를 보임
- **(연구개발비 차이)** 전기자동차 및 바이오 산업은 5% 유의수준에서 타 지역전략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 규모가 크게 분석됨
 - 바이오 산업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큰 반면 수익성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투입(input)이 성과(outcome)로 연결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
- **(특허성과 차이)** 특허성과에 있어서 스마트디바이스 및 헬스케어 산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전기자동차 및 스마트관광 산업은 저조하였음
- **(1인당 연구개발비 차이)** 조선해양 및 스마트디바이스, 첨단소재, 스마트관광 등 산업은 5% 유의수준에서 타 지역전략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종사자 1인당 연구개발비 규모가 크게 관측됨
- **(1인당 매출액 차이)** 지능형기계 및 헬스케어, 스마트시스템, 탄소소재, 특화소재 등 산업의 1인당 매출액은 타 지역전략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스마트시티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흡

<표 3-24> 전략산업별 기업성과 차이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연구개발	특허출원	1인당 연구개발비	1인당 매출액
자동차부품	-	-	-	-	-	-	-
전기자율차	-	-	-	450.39* (179.76)	-.90* (.45)	-	-
조선해양	-	-	-	-	-	19.12** (6.34)	-
지능형기계	585.99* (246.95)	-	-	-	-	-	77.98* (39.86)
기계지능부품	-	-	-	-	-	-	-
에너지	-	-	-	-	-	-	-
헬스케어	194.81* (87.47)	-240.18* (109.78)	-	-	.83* (.32)	-	39.57* (19.70)
농생명	-	-	-	-	-	-	-
화장품·식품	-	-	430.36* (207.02)	-	-	-	-
바이오	-	-	-784.05* (380.48)	434.37* (117.37)	-	-	-
스마트시티	-271.36* (122.72)	-	-205.62** (67.90)	-	-	-	-34.79* (17.58)
스마트시스템	313.61* (128.47)	-	-	-	-	-	59.30** (19.58)
스마트가전·전자	-	-	-	-	-	-	-
광융합	-	-	-	-	-	-	-
지능형반도체	-	-241.05*** (68.00)	-222.00** (79.04)	-	-	-	-
스마트디바이스	-	-117.57* (48.90)	-	-	1.29*** (.37)	16.64* (7.32)	-
지능정보서비스	-	-	-	-	-	-	-
탄소소재	469.36* (208.00)	-	-	-	-	-	142.99* (63.39)
첨단소재	-	-	-	-	-	17.86* (8.83)	-
특화소재	-	-	-	-	-	-	36.55* (16.39)
스마트관광	-	-	-	-	-16.16*** (.72)	62.49*** (4.74)	-
수송기기부품	-	-	-	-	-	-	-
obs	250	250	250	250	250	250	250
R ²	.206	.101	.121	.229	-	.202	.226
Log pseudolikelihood	-	-	-	-	-461.22	-	-

주: * 및 **, ***는 각각 5%, 1%, 0.1% 이내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괄호 안은 robust 표준오차임.

주2: 유의하지 않은 변수의 계수값은 제시하지 않음

□ 혁신창업기업의 성과 결정요인

- (성과 결정요인 분석모형) 혁신창업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OLS) 및 음이항(negative binomial; NB), 로짓(logit) 분석을 실시함
 - 종속변수의 형태에 따라 아래 <표 3-25>와 같이 적절한 방법론을 채택, 활용하였음

<표 3-25> 성과 결정요인 분석모형 채택결과

변수	형태	방법론
(Ln)1인당 연구개발비	연속형(continuous)	다중회귀(OLS)
(Ln)1인당 매출액	연속형(continuous)	다중회귀(OLS)
특허출원	가산형(countable)	음이항(NB)
고용확대	이진형(binary)	로짓(logit)

- (정부지원 효과) 정부지원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혁신창업기업의 1인당 연구개발비 및 특허출원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혁신창업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유발되고, 더불어 혁신창업기업의 기술적 성과가 개선되는 것을 의미
 - 반면에 정부지원을 통한 생산성 개선효과나 고용확대 결정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관측되지 않음
- (1인당 연구개발비 결정요인) 투자유치 및 정부지원 수혜규모, 창업자의 산업체경력, 연구개발인력비중, 과거 생산성 등은 혁신창업기업의 1인당 연구개발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투자재원) 연구개발강도는 투자유치 및 정부지원의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높아지고 동시에 과거 1기(t-1)의 1인당 매출규모(생산성)와 정(+)의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재원 조달이 창업기업의 혁신활동을 유발시키는 핵심요인임을 시사
 - (창업자 산업체경력) 산업체경력을 보유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1인당 연구개발비 규모가 큰 관계성이 나타난 원인은 동 분석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었으나, 창업자의 전문성이 자금조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Chatterji, 2009; Kirschenhofer and Lechner, 2012)의 주장에 근거하면 산업체경력이 혁신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함으로써 나타난 간접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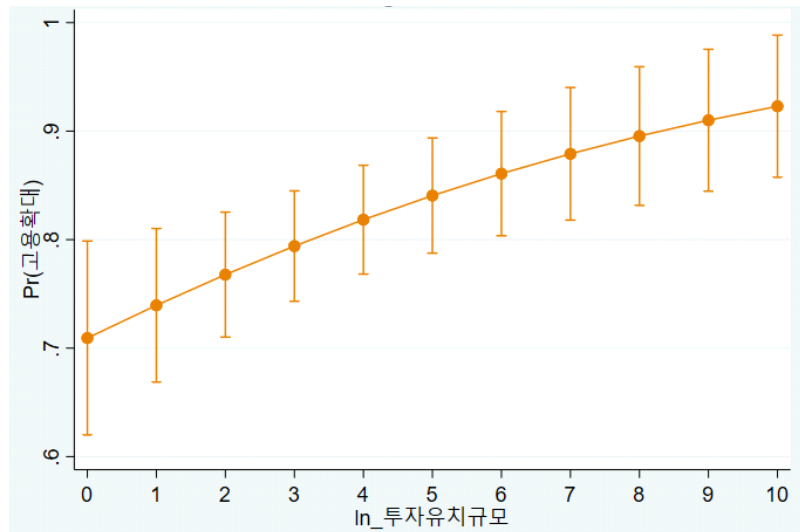
- (연구개발인력비중) 혁신창업기업의 전체 인력 중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1인당 연구개발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기업들이 특정 활동을 경쟁우위 창출의 핵심으로 인식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이나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하는 경영과정의 일반적 행태로 볼 수 있음
- (1인당 매출액 결정요인) 혁신창업기업의 1인당 매출액은 기업의 1인당 연구개발비 및 과거 1기($t-1$)의 매출액에 따라 높아지는 관계성을 보임
 - (1인당 연구개발비) 혁신창업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활동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나타내며, 앞서 정부지원 및 과거 생산성이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 관계성이 확인된만큼 정책적 관점에서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고 지속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
 - (과거 매출액) 혁신창업기업의 1인당 매출액은 과거 매출액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기업의 지속성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성장의 허들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 (특허성과 결정요인) 혁신창업기업의 특허성과는 투자유치 및 정부지원 규모, 관련특허보유, 창업자의 과거 창업경험, 1인당 연구개발비 등과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연구개발비) 1인당 연구개발비 및 특허성과간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나는 바, 혁신창업기업의 기술혁신에 있어서도 연구개발이 강조된다는 점이 확인됨
 - (투자유치) 투자자금의 조달규모가 큰 기업의 특허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혁신창업기업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이 제공됨에 따라 기술혁신을 달성한 것과 동시에 본래 특허성과가 높은 기업이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자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 특허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증명해주는 지표로서 투자유치에 이점을 가져다 주는 요소로 주장되고 있음(Mann and Sager, 2007)
 - (관련특허 및 창업경험) 창업자가 관련특허 및 창업경험을 보유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특허출원 성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습효과(learning by experience)에서 기인한 결과임
 - * 기존 혁신활동 축적한 지식은 새로운 기술혁신 달성 및 성과 창출에 기여 (Audretsch et al., 2005)
 - * 이와 더불어 특허를 보유하면 기업의 핵심기술의 모방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자원 소요가 불필요하여 혁신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술혁신 달성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음(Shane, 2001)

- **(고용 결정요인)** 기업이 유치한 투자규모 증대는 고용확대를 결정할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업력이 길수록 이러한 가능성이 감소
 - － **(투자유치)** 투자유치 규모가 큰 창업기업일수록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평가하는 것으로([그림 3-2]), 투자자금 조달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성이 확보되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업력)** 업력 및 고용확대 결정간 반비례하는 관계성은 창업 초기의 기업일수록 고용확대 의지가 높다는 의미([그림 3-3])
 - * 창업 초기의 기업들은 신규인력 채용을 통해 경쟁우위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기반을 갖추려는 노력을 상대적으로 활발히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 * 그러나 고용확대에 대한 의사결정이 보편적이기 보다는 신규 창업기업의 경우 고용시장에서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처럼 강한 노동수요가 있는 기업군에 편향적일 것이란 예측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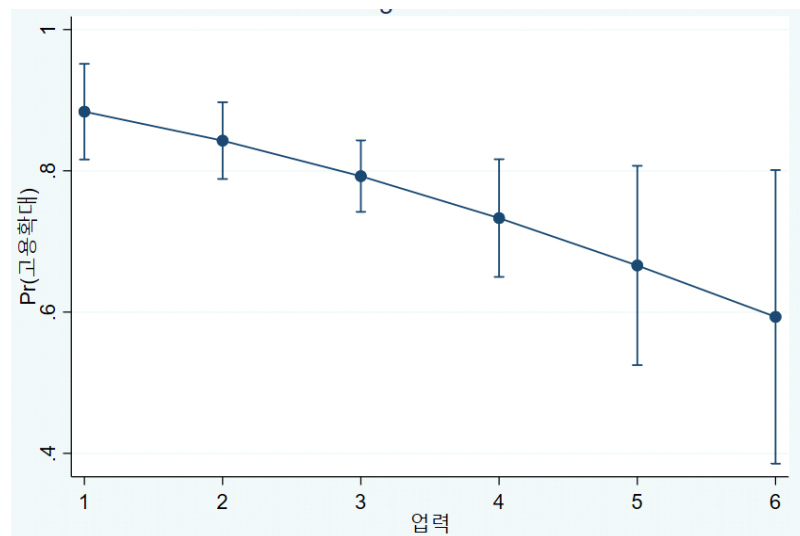
<표 3-26> 연구개발투자 및 성과 결정요인 분석결과

구분		(Ln)1인당 연구개발비 _t	(Ln)1인당 매출액 _t	특허출원 _t	고용확대 ²⁾
창업 기업 특성	업력	-	-	-	-.423* (.192)
	투자유치규모	.094* (.037)	-	.064* (.030)	.199** (.075)
	이전(출자)후속지원	-	-	-	-
창업자 특성	창업자학력	-	-	-	-
	산업체경력유무	.567* (.254)	-	-	-
	관련특허보유여부	-	-	.562** (.205)	-
	과거창업경험유무	-	-	.558*** (.156)	-
	창업교육이수경험	-	-	-	-
	창업파트너유무	-	-	-	-
혁신 특성	연구개발인력비중	1.581*** (.352)	-	-	-
	박사비중	-	-	-	-
	(Ln)1인당 매출액 _{t-1}	.182** (.057)	.756*** (.050)	-	-
	(Ln)1인당 연구개발비 _{t-2}	-	-	-	-
	(Ln)1인당 연구개발비 _{t-1}	-	-	-	-
	(Ln)1인당 연구개발비 _t	-	.191** (.063)	.159* (.074)	-
정부 지원	정부지원규모	.149* (.069)	-	.200*** (.061)	-
	정부지원기여도	-	-	-	-
산업(더미)		(included)			
cons		-	1.137* (.471)	-1.471* (.570)	-
R ²		.300	.670	.103	-
Log pseudolikelihood		-	-	-421.369	-96.617
obs.		250	250	250	245
model		OLS	OLS	NB	Logit

주: * 및 **, ***는 각각 5%, 1%, 0.1% 이내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괄호 안은 robust 표준오차임.
주2: 지능형반도체 산업(n=5)은 비교군이 존재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됨(즉, 모두 고용확대로 응답함)
주3: 특허출원에 대한 모형의 R²는 Pseudo R²임
주4: 1인당 매출액 및 특허출원에 대하여 1인당 연구개발비의 과거시점 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는
위계적 방식으로 분석하였으나 결과의 차이가 없어 전체 모형(full model)만 제시하였음.



[그림 3-6] 고용확대 결정에 대한 투자유치 규모의 한계효과



[그림 3-7] 고용확대 결정에 대한 압력의 한계효과

4. 소결

□ 재정효율성 관점에서 혁신창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 혁신창업 및 기업 성장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한 허들임
 - － 재무적 요소(R&D자금, 인건비)에 대한 정부지원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동시에, 창업시 자금확보 및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 정작 정부의 예산지원은 규모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그림 3-1])
 - － 특히 수요관점에서 기업들은 설립 후 초창기 정부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 정부는 창업기업 발굴,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 창업자부터 기업성장단계별 전주기 지원을 목표로 설정
 - * 대학, 기관, 협회 등에 국고 예산이 투입되어 각 단계별로 창업자금, 사업화 관련 비용(법률자문비/특허출원비/마케팅비 등), 투자기회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국고예산이 투입되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이러한 허들을 넘어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되어야 하겠음
 - － 공공부문 투자는 본래 시장실패를 보정하여 경제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 － 이에 따라 민간 자본시장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창업자 및 혁신창업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잠재력 있는 기업이 발굴되고 육성되어야 함
- 이와 더불어 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부문 또는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연계 강화,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
 - － 국고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창업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도모
 - － 중앙정부 지원 방식에서 각 산업별·지역별 전담기관이 주도하여 밀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지역전략산업육성 관련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이 시급

-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 및 실패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타 정책추진의 간접효과가 상당 수준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함

- 그러나 관련된 가용 데이터의 부재로 문제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진단에 한계 존재
 - － 동 정책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데이터(예산 또는 사업현황) 또는 전담 성과관리체계 등이 없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분석이 불가능 실정임
 - － 현재 조사되고 있는 성과자료는 타 정책과의 중복성이 많아 지역 전략산업육성정책 추진에 따른 직접 효과로 보기 어려움
- 구별된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의 효과 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조사가 필요

[참고]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 효과분석 방안

□ **(현황)**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에 따라 집행된 예산 및 추진된 사업 성과를 타 정책효과와 구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재

- 부처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전략산업육성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현재 지원사업 과제의 분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가 유일한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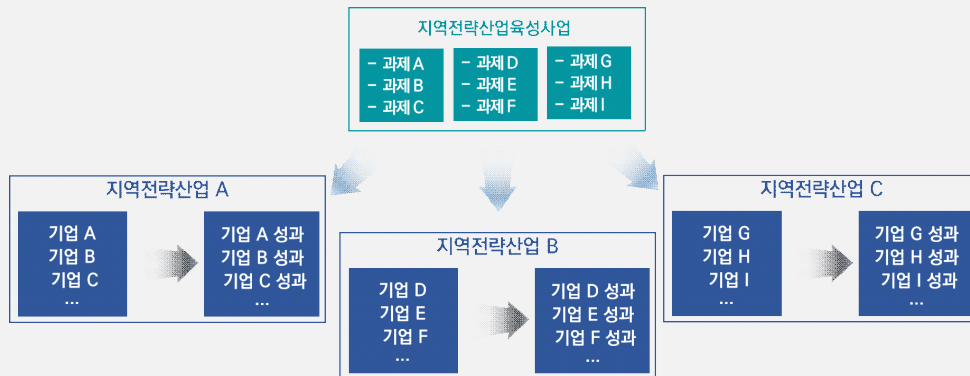
□ **(연구내용)** 연구진은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의 효과분석 방안 도출과정의 예시로서 다음의 과업을 수행함

- 중앙정부 예산 내 지역전략산업육성과의 관련성 있는 계정 및 사업 분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를 대상으로 함
 - 2009년 ~ 2019년 기간 내 추진된 과제를 대상으로 조사함
 - 작업 결과 총 182개 사업, 106,094개 과제가 도출됨
- 지역전략산업육성 관련 부처별 사업예산 및 과제, 과제별 성과 데이터 수집·정리(국회예산정책처 협조)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18년 개정 기준)-지역전략산업 매칭을 위한 전문가 자문·분석
 - 자문기간: 19.08.22 ~ 19.08.26(5일간)
- 지역전략산업별 혁신창업기업 대상 설문결과 활용 성과분석(3장)

□ **(향후 연구방향 제안)**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 관련 현황 전수조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지역전략산업 간 세부 매칭, 다층모형을 활용한 계량분석 등 필요

-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 관련 예산집행내역, 사업 및 과제별 성과 현황 자료를 전수조사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내 소분류 단위에서 지역전략산업과 매칭 작업 실시
 - 과거 추진되었던 정부사업 과제는 모두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내 소분류 단위로 구분되어 있어 있음
 - 각 과제별 투입예산 및 성과는 조사되고 있으나, 이들 과제와 지역전략산업 간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
 - 양 분류체계를 매칭할 경우, 정부사업 과제 자료(예산 및 성과)를 활용하여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 효과 분석이 가능함

-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활용하여 정책적 지원에 따른 기업성과 분석
 - 다층모형을 통해 기업 수준의 분석과 기업이 집락되어 있는 상위 집단으로서 지역전략산업 단위 수준의 분석을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각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노력(input)과 해당 지역전략산업에 속한 기업성과 간 인과관계 확인이 가능





04.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혁신창업 활성화지원 개선방안

IV.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혁신창업 활성화지원 개선방안

1. 성과 결정요인을 고려한 창업지원사업 설계

- 정량 연구를 통해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 지원사업 설계로 국고예산 투자효과 극대화 도모
 - 동 연구에서는 혁신창업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및 매출, 특허출원 등 증대, 고용 확대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음
 - － 동 연구의 혁신창업기업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재정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창업기업의 투자유치규모, 연구개발인력비중, 관련특허보유현황, 창업자경력 등을 고려한 창업지원사업 설계가 필요
 -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구결과는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음
 - 수요자 관점에서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혁신창업 지원사업 기획·추진 필요

2. 지역 주도 R&D 정책으로 지역혁신의 패러다임 전환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시스템을 전환, 각 지역이 고유한 특성이나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내생적인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도록 방향 설정
 -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은 재정 효율성 관점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음
 - 중앙정부가 지역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 지역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
 - － 이 경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사전 파악하여 지원 사업을 설계·제시해야 함
- 지역주도 R&D 정책에 따라 지역전략산업육성, 즉 지역혁신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R&D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 평가환류 필요

-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연구개발(R&D) 체계가 올해('19)부터 '지역주도형 R&D' 로 개편됨
- 과기정통부는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과학기술지분계획(2018~2022)의 '2019년도 시행계획' 을 수립·확정함
 - － 지자체(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원단) 중심으로 지역혁신기관간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플랫폼 기능 강화 추진(8.8, 혁신성장장관회의)
 - － 지역 R&D사업 심층분석 시범실시(10.25,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 － 지역R&D 사업의 명확한 기준 설정, 지역별 통계기반 구축 강화 추진
- 상기 계획과 관련, 중앙정부 예산은 R&D/비R&D로 분류되어 있으나 지방재정은 별도 분류되지 않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R&D 예산 비목 간 연계 필요
 - － 이를 위한 지역산업전담 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측정 시스템 정비 필요

□ 지역전략산업 생태계 내 혁신역량 제고 및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인력양성 확대

- 지역전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유관분야 전문인력의 확보 및 양성이 필요
 - －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혁신창업에 있어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하였고,
 - － 초기에 지역 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부 기업의 유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이 성장할 수 있으나, 인력 부족시 지속성장은 어려움
- 지역거점대학을 활용한 적극적인 우수인력양성을 통해 전략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사업 마련

□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균특회계 내 포괄보조사업의 비중을 확대하여 지역 주도성 강화

- 현재 포괄보조사업에 기반한 지역의 자율성이 지역수요에 미달하고, 중앙주도로 재원이 배분되어 지역별 특화성·효과성이 저감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연구원, 2019)

-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의 여건·특성에 맞는 구상과 기획을 담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3. 지역전략산업과 국가산업육성과의 역할분담 및 연계 강화

□ 중앙정부의 국가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사업과 지역의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사업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중복 방지 및 효율성 제고

- 자율주행, 바이오 등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과제들이 기초·원천기술을 개발
- 동시에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 지역은 기 개발된 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 및 그 인프라를 활용한 실질적인 사업화에 집중하는 연계성을 고려

□ 각 지역의 창업 및 산업기술지원 기관이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층 인재가 각 지역 산업으로 연결되는 경로 마련

- 지역인재 유출 및 청년층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지역 산업에서 숙련수요(skill demand) 대비 숙련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지역에 기반한 혁신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 지역전략산업에 적합한 인력이 지역 혁신창업기업과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
 - － R&D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 지역 기업연구소에 대한 추가 혜택 제공 등 신규고용에 수반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산업의 창업 생태계 조성 지원
- 더불어 혁신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 청년인식 개선 노력 병행

V. 참고문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연구원(201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연구』,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2018~20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정부R&D 예산 20조원 시대의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 관계부처 합동(2015),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2018),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안)”.
- 박재곤·변창욱·이상호(2015), 『지역산업의 클러스터 매핑 분석과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산업연구원(2019),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전략과 과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지역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7), 『2017년 균형발전 주요통계집』.
- 지역발전위원회(2017), 『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성과분석』.
- 지역발전위원회(2018a),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 지역발전위원회(2018b), 『지역발전정책백서』
-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지역 주도 R&D사업 기획 지원방안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보고서.
- Audretsch, D. B., Keibach, M. and Lehmann, E. (2005), “The 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 and Technological Diffusion”, in Libecap, G.(ed.), *University Entrepreneurship and Technology Transfer*, Bingley: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pp.69-91.
- Chatterji, A. K. (2009), “Spawned with a Silver Spo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and Innovation in the Medical Device Indust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30, No.2, pp.185-206.
- Kirschenhofer, F. and Lechner, C. (2012), “Performance Drivers of Ser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and Team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 Research*, Vol.18, No.3, pp.305-329.

- Mann, R. J. and Sager, T. W. (2007), "Patents, Venture Capital, and Software Start-ups", *Research Policy*, Vol.36, No.2, pp.193-208.
- Shane, S. (2001), "Technological Opportunities and New Firm Creation", *Management Science*, Vol.47, No.2, pp.205-220.

VI. 부록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지역전략산업 사전 매칭 결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지역전략산업		
대	중	소	1	2	3
건설/교통	건설시공/재료	12	스마트 시스템	스마트시티	
	건설환경설비기술	8	스마트 시스템	스마트시티	
	국토공간개발기술	8	스마트 관광	스마트시티	
	국토정책/계획	5	스마트 관광	스마트시티	
	기타건설/교통	1	스마트시티		
	도로교통기술정부	7	스마트시스템	스마트시티	전기·자율차
	물류기술	8	수송기기부품	조선해양	
	시설물 설계/해석기술	10	스마트시티	조선해양	
	시설물안전/유지관리 기술	6	스마트시티	조선해양	
기계	국방플랫폼	19	기계·지능부품		
	기타기계	1	기계·지능부품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9	기계·지능부품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시스템
	로봇/자동화기계	8	기계·지능부품	스마트 시스템	
	산업/일반기계	9	기계·지능부품		
	생산기반기술	11	기계·지능부품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10	기계·지능부품	스마트 시스템	
	요소부품	12	기계·지능부품		
	우주발사체	9	기계·지능부품		
	인공위성	9	기계·지능부품		
	자동차/철도차량	11	기계·지능부품	자동차부품	
	재난안전장비	9	기계·지능부품		
	정밀생산기계	9	기계·지능부품		
	조선/해양시스템	10	기계·지능부품	조선해양	
	측정표준/시험평가기술	10	기계·지능부품		
	항공시스템	7	기계·지능부품		
농림수산 식품	기타농림수산식품	1	농생명		
	농림수산식품 경영/정보 등	7	농생명		
	농생물학/작물보호	9	농생명		
	농수축산물 안전	7	농생명		
	농업기계/설비	7	농생명	기계·지능부품	
	농업인프라 공학	6	농생명		
	농업환경생태	8	농생명		
	농화학	4	농생명		
	동물자원과학	9	농생명		
	산림자원학	10	농생명		
	수산양식	8	농생명		
	수산자원/어장 환경	12	농생명		

	수의과학	11	농생명		
	식량작물과학	8	농생명		
	식품과학	10	농생명	바이오	화장품·식품
	식품영양과학	8	농생명	바이오	화장품·식품
	식품조리/외식/ 식생활개선	11	농생명		화장품·식품
	어업생산/이용가공	9	농생명		화장품·식품
	원예특용작물과학	7	농생명		
	임산공학	10	농생명		
	조경학	7	농생명		
물리학	원자핵물리	6	광융합		
보건의료	식품안전관리	13	화장품·식품		
	의료기기안전관리	6	바이오		
	의료정보/시스템	7	바이오		
	의생명과학	14	바이오		
생명과학	기타생명과학	1	바이오		
	바이오공정/기기	6	바이오		
	산업바이오	9	바이오		
	유전학/유전공학	7	바이오		
	융합바이오	7	바이오		
에너지/자 원	가스에너지	4	에너지산업	스마트시티	
	기타에너지/자원	1	에너지산업	스마트시티	
	송배전계통	12	에너지산업	스마트시티	
	수화력발전	8	에너지산업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13	에너지산업	스마트시티	
	온실가스 처리	5	에너지산업	스마트시티	
	자원탐사/개발/활용	5	에너지산업	스마트시티	
	전력 IT	6	에너지산업	스마트시티	
원자력	기타원자력	1	에너지산업		
	방사선기술	8	에너지산업		
	원자력 계측/제어기술	7	에너지산업		
	원자력 안전기술	9	에너지산업		
	원자력기반/첨단기술	6	에너지산업		
	원자로 노심 기술	5	에너지산업		
	원자로 계통/핵심기기 기술	8	에너지산업		
	원전 건설/운영기술	8	에너지산업		
	핵연료/원자력소재	5	에너지산업		
	핵연료주기/방사성 폐기물관리기술	7	에너지산업		
	핵융합	9	에너지산업	광융합	
재료	고분자재료	12	첨단소재		
	국방소재	11	첨단소재	특화소재	
	금속재료	10	첨단소재		
	기타재료	1	첨단소재		
	분석/물성평가기술	8	첨단소재		
	세라믹재료	12	첨단소재		
	소성가공/분말	9	첨단소재		
	열/표면처리	10	첨단소재		
전기/전자	주조/용접/접합	11	첨단소재		
	가정용기기/ 전자응용기기	10	스마트가전전자	스마트 디바이스	

	계측기기	9	스마트 시스템	지능형기계	
	광응용기기	9	스마트 시스템	지능형기계	
	디스플레이	11	스마트가전전자	스마트 디바이스	기계·지능부품
	무기센서 및 제어	18	스마트가전전자	지능형기계	
	반도체소자/시스템	8	스마트가전전자	지능형 반도체	
	반도체장비	11	스마트가전전자	지능형 반도체	
	영상/음향기기	14	스마트가전전자	스마트 디바이스	
	전기전자부품	9	스마트가전전자	스마트 디바이스	
	전지	7	스마트가전전자	스마트 디바이스	
	충전기	15	스마트가전전자	스마트 디바이스	
정보/통신	ITS/텔레매틱스	5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시스템	지능정보서비스
	RFID/USN	6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시스템	지능정보서비스
	U-컴퓨팅	4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시스템	지능정보서비스
	광대역 통합망	5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시스템	지능정보서비스
	국방정보통신	11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시스템	지능정보서비스
	기타정보/통신	1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시스템	지능정보서비스
	디지털방송	7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시스템	지능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5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시스템	지능정보서비스
	위성/전파	9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시스템	지능정보서비스
	이동통신	4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시스템	지능정보서비스
	재난정보관리	7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시스템	지능정보서비스
	정보통신 모듈/부품	6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시스템	기계·지능부품
	홈네트워크	5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시스템	지능정보서비스
화공	고분자 공정기술	7	탄소소재	특화소재	첨단소재
	기타화공	1	탄소소재	특화소재	첨단소재
	나노화학공정기술	6	탄소소재	특화소재	첨단소재
	무기화생방/화력탄약	21	탄소소재	특화소재	첨단소재
	생물화학 공정기술	8	탄소소재	특화소재	첨단소재
	섬유제조	11	탄소소재	특화소재	첨단소재
	섬유제품	10	탄소소재	특화소재	첨단소재
	염색가공	8	탄소소재	특화소재	첨단소재
	정밀화학	16	탄소소재	특화소재	첨단소재
	화학공정	8	탄소소재	특화소재	첨단소재
	화학공정 안전기술	8	탄소소재	특화소재	첨단소재
	화학제품	5	탄소소재	특화소재	첨단소재
화학	고분자화학	9	탄소소재	특화소재	첨단소재
환경	대기질관리	5	스마트시티	스마트 관광	에너지산업
	물관리	7	스마트시티	스마트 관광	에너지산업
	생태계 복원/관리	3	스마트시티	스마트 관광	에너지산업
	소음/진동관리	4	스마트시티	스마트 관광	
	위해성 평가 관리	4	스마트시티	스마트 관광	
	작업환경기술	6	스마트시티	스마트 관광	
	청정생산/설비	9	스마트시티	스마트 관광	에너지산업
	측정분석장비/장치	4	스마트시티	스마트 관광	에너지산업
	친환경 공정	3	스마트시티	스마트 관광	
	친환경 소재/제품	3	스마트시티	스마트 관광	에너지산업
	토양/지하수복원/관리	5	스마트시티	스마트 관광	에너지산업
	폐기물관리/자원순환	4	스마트시티	스마트 관광	에너지산업
	해양환경	6	스마트시티	스마트 관광	
	환경보건	9	스마트시티	스마트 관광	
	환경예측/감시/평가	4	스마트시티	스마트 관광	

